환황해권 시대의 도래와 충남의 미래

송두범(충남연구원 미래전략연구단장)
홍원표(충남연구원 미래전략연구단 미래연구팀장)

Ⅰ. 시작하는 말
Ⅱ. 환황해권 시대의 도래와 위상
Ⅲ. 국내외 초국경 협력정책 및 협력동향
Ⅳ. 환황해권시대의 도래에 따른 충남의 대응전략
Ⅴ. 맺음말

Ⅰ. 시작하는 말

○ 세계경제의 흐름은 다자간 무역자유화의 영향으로 교역 및 교류의 개방화가 진전되는 가운데, 지역주의에 근거한 경제통합이 가속화되고 있음.

○ 특히 지역주의화는 일정지역 내의 국가들이 점증하는 상호의존성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공동체(경제협력, 경제통합, 블록화 등)를 만들고 역내 국가간 특혜대우를 부여하는 것임(국토해양부, 2011;16).

○ 1957년 3월 25일 벨기에, 프랑스, 독일(서독),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등 유럽6개국으로 출범한 유럽경제공동체(EEC : European Economic Community)를 시작으로 세계는 경제블럭화, 지역경제통합이 가속화되고 왔고, 90년대 이후 본격적으로 논의되어 왔음.

[그림 1] 다자주의에 근거한 지역경제통합의 구조

자료: 국토해양부. 2011. 새만금복합도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환황해권 상생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연구. p.16.

○ 환황해권은 1991년 기타큐슈, 시모노세키, 부산, 인천, 대련, 청도 등 6개 도시가 참가하는 동아시아(환황해) 도시회의가 출범하면서 도시간 협력 및 경제교류가 시작되었음(OEAED, 2012).[1)]

○ 2004년 11월 16일 한중일 10개 도시[2)]의 시장과 경제계대표가 기타큐슈시에서 자리를 함께하고 행정과 민간이 일체가 되어 동 「아시아 경제교류추진기구」를 설립하였음(OEAED).

○ 환황해권(한국의 서해안지역, 중국의 동해연안지역, 일본큐슈지역)은 인구 2억 5,500만명, 지역내 총생산 1조 5천억달러로 동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지역으로 상호교류 및 협력을 통한 경쟁구도를 형성하고 있으며, 글로벌 광역거점형성 가능성을 높이고 있음.

○ 특히, 한국과 중국은 황해를 사이에 두고 해상과 항공교통이 잘 발달된 지역을 중심으로 산업클러스터가 형성되어 있어 인적, 물적 교류가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음.

○ 중국의 급속한 발전을 동해연안지역이 견인하고 있다는 점[3)]에서 향후 환황해권의 위상은 더욱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

○ 가히 환황해권시대로 부를만한 시대가 도래하고 있는 것을 행정, 민간 모두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의 대응은 관행적인 교류 및 협력수준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환황해권 시대의 부상에 따른 자치단체간 경쟁과 협력이 더욱더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환황해권시대의 중심 자치단체로 웅비하기 위한 충청남도의 대응전략을 다자간 협력체계 내에서 그려보고, 실현을 위한 과제를 제시코자 함.

Ⅱ. 환황해권 시대 도래와 위상

1. 환황해권의 범위

○ 이강선(1997)은 환황해권의 지리적 범위로 황해를 공유하고 있는 대한민국, 북한, 중국, 일본의 자치단체를 먼저 권역에 포함시키고 근접한 다른 자치단체는 업저버로 향후 필요에 따라 권역내로 참여시킬 수 있는 후보지역으로 설정.

---

1) OEAED. 2012. 동아시아 경제교류추진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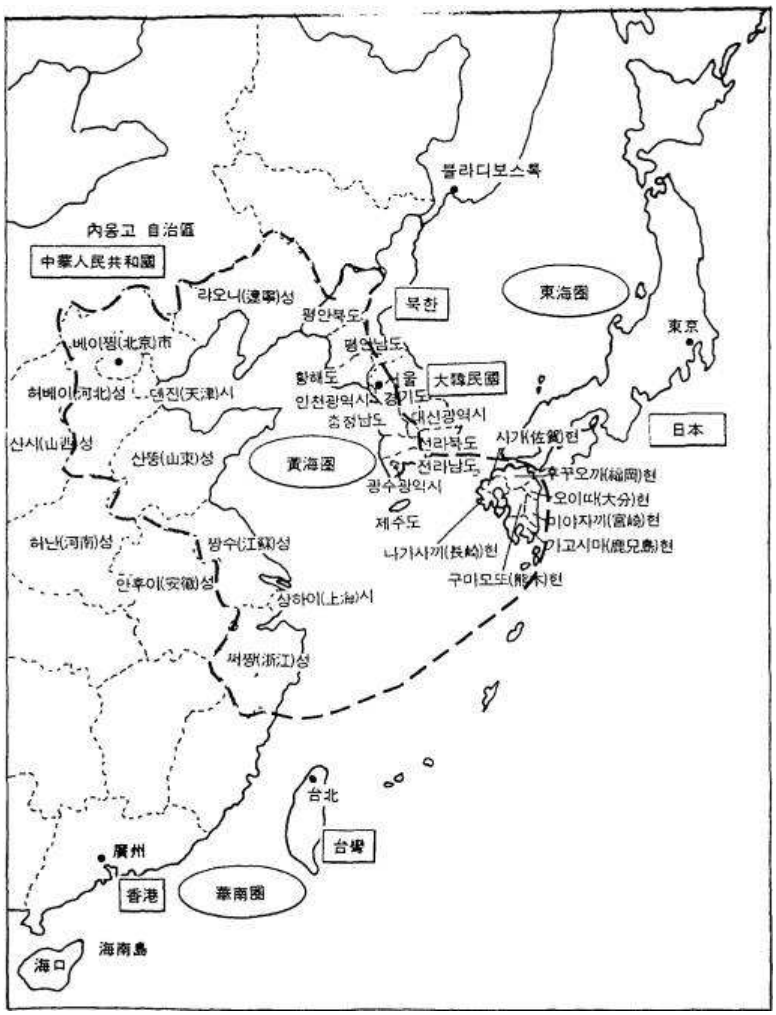
2) 한국(부산, 인천, 울산), 중국(대련, 청도, 천진, 연태), 일본(후쿠오카, 키타큐슈, 시모노세키)

3) 중국은 현재 13개 지역발전규획과 함께 상하이를 중심으로 하는 창장삼각주, 베이징·텐진·허베이를 중심으로 하는 징진지 도시권규획, 다롄을 중심으로 하는 랴오닝 연해경제벨트 등과 같은 지역발전 전략을 수립하여 대외개방을 심화하고 각 지역에 성장거점을 육성할 계획임.

〈표 1〉황해권역 국가별 자치단체

구 분	정 회 원	업 저 버
대한민국	충청남도, 인천광역시, 경기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제주도	서울특별시, 대전광역시, 광주광역시
북 한	평안북도, 평안남도, 황해도 (평양특별시, 남포직할시, 개성직할시, 평안남도, 평안북도, 황해남도, 황해북도)	
중 국	텐진시, 상하이시, 랴오닝성, 허베이성, 산동성, 장수성, 저장성	베이징시, 산시성, 허난성, 안후이성
일 본	구마모토현, 나가사키현, 사가현, 후쿠오카현, 오이타현, 미야자키현, 가고시마현	

자료: 이강선. 1997. 환황해경제권 구축과 충청남도의 역할. 충남대학교 아시아지역연구소 심포지엄.



자료: 이강선. 1997. 환황해경제권 구축과 충청남도의 역할. 충남대학교 아시아지역연구소 심포지엄.

○ 강용기(2005)는 환황해권의 범위를 한국 서해안과 한국 서해안에 인접한 중국 동부중상해 이북지역을 의미하는 것으로 중국 랴오닝성에서 장쑤성, 상하이시, 그리고 동중국해 북부에 이르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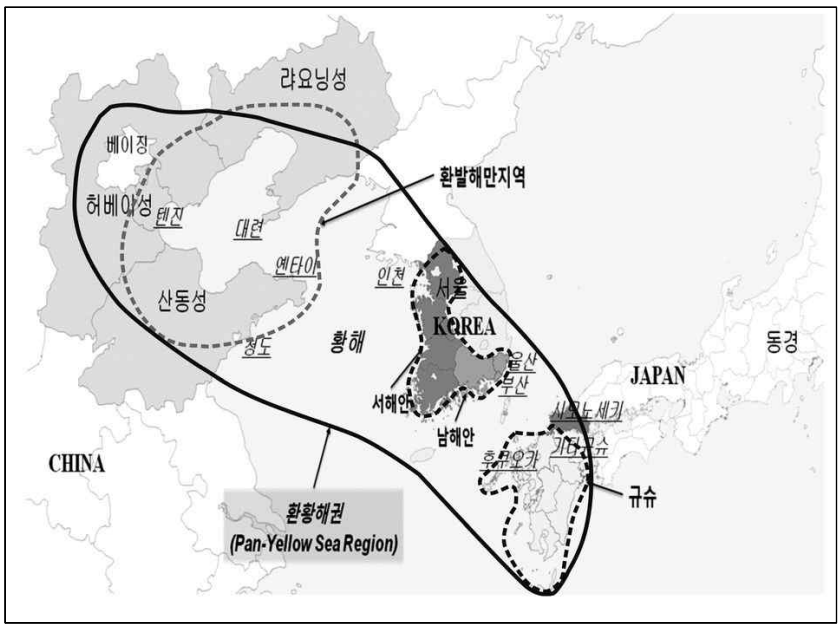
자료: 강용기. 2005. 환황해권 지방정부간의 협력과 관리체제 구축. 한국자치행정학보, 제19권 제3호.

○ 경기개발연구원(2008)은 환황해경제권의 지리적 범위로 중국의 동북연안지역인 요녕성에서 절강성에 이르는 연안지역과 우리나라 서해지역, 일본의 일부지역을 포함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음.

자료: 김군수 외. 2008. 환황해권 경제협력에 대한 연구. 경기개발연구원. 정책연구 2007-57.

○ OECD(2010)에서는 환황해권의 지리적 경계로 중국북부 해안지역(환발해만), 일본 서남 해안지역(큐슈), 한국의 남해안과 서해안지역을 포괄하는 협의의 환황해권을 제시하고 있음.

– 중국(산둥성, 허베이성, 랴오닝성, 텐진), 일본(후쿠오카현), 한국(경기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인천, 경상남도, 부산, 울산)



자료: OECD. 2010. 환황해권 초국경도시간 협력.

○ 장윤정(2010)는 환황해권을 크게 중북 북부해안지역(환발해만), 일본 서남해안지역(큐슈),그리고 한국의 남해안과 서해안 지역을 포괄하고 있음. 그러나 환황해권의 지리적 경계가 정확히 어디인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고 주장

자료: 장윤정. 2010. 중국 환황해 주요도시 발전전략 연구.

○ 국토해양부(2011)에서는 한국 서해안권과 남해안권(일부), 중국 저장성 이북 동부연안지역(랴오닝성, 허베이성, 산둥성, 장쑤성, 저장성, 베이징시, 텐진시, 상하이시), 일본 큐슈를 포함하는 광의의 환황해권과 한국의 서해안권, 중국의 상하이 이북 동부연안지역(환발해만권), 일본의 큐슈(일부)를 포함하는 협의의 환황해권을 제시하고 있으나, 협의의 개념을 사용.[4)]

자료 : 국토해양부. 2011. 새만금 복합도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환황해권(한중일)상생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연구.

○ 향후 환황해권 정책추진을 위해 협의의 환황해권과 광의의 환황해권으로 구분하여 제시한, 국토해양부(2011)의 안중 광의의 환황해권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 [5)]

- 협의의 환황해권 : 중국의 환발해권(허베이성, 랴오닝성, 산동성, 베이징, 텐진), 한국의 서해안(경기, 충남, 전북, 전남, 제주), 일본의 큐슈(후쿠오카), 북한의 서해안(황해도, 평안도)을 포함하는 권역으로 규정
- 광의의 환황해권 : 협의의 환황해권에 더해 중국의 장쑤성, 저장성, 상하이시, 한국의 경상남도, 일본의 큐슈 전지역을 포함하는 권역으로 규정.

4) 환황해권과 혼용되는 '환황해경제권'은 공간적 개념이라기 보다 황해주변에 있는 한국, 중국, 일본이 지자체간 경제교류구역을 의미함. 다만, 3국이 국가나 지역차원에서 협약을 맺거나 경제협력 또는 통합권역으로 선포한 것이 아니므로 실제 경제권이 형성된 것은 아님(국토해양부. 2011. 새만금복합도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환황해권 상생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연구. p.7).

5) 중국의 내륙과 홍콩, 대만, 아세안지역을 포함하는 초광역 환황해권을 상정해 볼 수 있으나, 이는 수 RCEP참가국가와 거의 경계를 같이하고 있어 따로 환황해권으로 부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검토해봐야 할 것임.

〈표 2〉 기존연구에서의 환황해권의 범역비교

구 분		한 국	북 한	중 국	일 본
이강선(1997)		충남, 인천, 경기, 전북, 전남,제주	평양, 남포, 개성, 평북, 평남, 황북, 황남	텐진, 상하이, 랴오닝,허베이, 산동, 장수, 저장	구마모토, 나가사키, 사가, 후쿠오카, 오이타, 미야자키, 가고시마
강용기 (2005)	협의	서울, 인천, 대전, 광주, 경기, 충남, 전북, 전남, 제주	평양, 남포, 평북, 평남, 황북, 황남	베이징, 텐진, 상하이, 랴오닝, 허베이, 산동, 장쑤	–
	광의	협의+부산, 경남	평양, 남포, 평북, 평남, 황북, 황남	협의+헤이룽장성, 지린성, 저장성	큐슈전역
경기개발연구원(2008)		인천, 경기, 충남, 전북, 전남	–	요녕, 하북, 천진, 산동, 강소, 사해, 절강	–
OECD(2010)		경기, 충남, 전북, 전남, 인천, 경남, 부산, 울산	–	산동, 허베이, 랴오닝, 텐진,	푸쿠오카
국토해양부 (2011)	협의	경기, 충남, 전북, 전남, 제주	–	허베이, 랴오닝, 산동, 베이징, 텐진	후쿠오카
	광의	서울, 경기, 충남, 전북, 전남, 제주, 경남		허베이, 랴오닝 산동, 베이징, 텐진, 장쑤, 저장, 상하이[6]	구마모토, 나가사키, 사가, 후쿠오카, 오이타, 미야자키, 가고시마

[그림 2] 환황해권의 범위

6) 상하이는 그 영향력이 주변지역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환황해권에 포함시키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OECD, 2010:24).

2. 환황해권의 현황

○ 환황해권은 오래전부터 한중일 3국간 인적, 물적, 기술적 교류의 요충지로 해안무역이 전성기를 누렸던 시기는 중국은 당나라, 한국은 신라시대, 일본은 야마토, 나라, 헤이안시대였음.

○ 환황해권의 무역중심지는 중국의 랴오닝성과 산동성, 한국의 서해안과 남해안, 일본의 큐슈지방으로 지역통합이 바닷길을 통해 활발하였기 때문에 '동아시아의 지중해'로 불리기도 하였음.

○ 환황해권 지역통합을 견인한 것은 시장경제(다국적기업)와 지방분권화, 지리적 근접성임(OECD. 2010:29-30).

[동아시아의 지중해]

항구도시간 상업적 교류가 활발하다는 이유로 Lomband & Aubin(1988), Gipouloux(1996)를 비롯한 많은 전문가들이 환황해권을 '동아시아의 지중해' 라고 불렀다. 지중해와 환황해권은 지리적 위치, 면적, 형태 면에서 매우 유사하다(Ogawa, 2006). 실제로 두 지역 모두 북위 30-45° 사이에 위치하고 있고, 면적은 지중해가 250만㎢, 환황해권이 220만㎢로 매우 비슷하며, 주변이 대부분 육지로 둘러싸여 있다는 공통점도 있다. 대륙아시아의 관점에서 보면, 중국과 다른 동아시아 국가의 해안지역은 지금껏 변방에 지나지 않았다. 반면 해양아시아의 관점에서 보면 동아시아의 경제성장과 교류를 선도해온 것은 다름 아닌 항구도시였다. 환황해권의 주요 항구도시가 최근 경제적으로 크게 성장한 시살 또한 해양아시아 관점을 역설하는 것으로, 항구도시의 성장은 환황해권 지역개발 구도의 재편을 촉진시켰다. 사실, 남중국해부터 황해까지 이어지는 중구의 항구도시는 중국 시장개방과 경제성장이 원동력으로 작용해왔다. 일본 하계에서는 오랜 역사를 지닌 환황해권이야말로 긴밀한 네트워크만 형성된다면 무한한 성장을 거듭할 수 있는 최적의 지역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Hamashita, 1990). 심지어 일부 전문가들은 환황해권의 범위를 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톡과 인도네시아의 발리까지 보고 있다.

출처: Kim W-B(2008). OECD. 2010. p.29에서 재인용.

○ 환황해권이 차지하는 비중은 적지만, 인구 및 GDP비중은 높은 편임

- 환황해권 면적은 세계의 0.5%, 한중일 3국의 8.0%에 불과하지만, 인구는 세계의 6.3%, 한중일 3국의 26.8%, GDP도 세계의 4%, 한중일 3국의 29.4%를 점유하고 있음(국토해양부, 2011;23).

○ 이는 한중일의 경제활동, 자본 및 인력이 환황해권에 집적되어 있고, 거대한 시장이 형성되어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중국성장과 함께 환황해권의 위상은 더욱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

〈표 3〉 환황해권지역의 경제규모

구 분	면적	인구(100만)	GDP(조원)
세계	148, 430,000	6,437	89,996.5
중국(2009)	9,506,930	1,335	5,763.3
동해연안지역	742,330	386	2,699.6
일본2008)	377,835	127.3	5,563.3
큐슈	42,163	13.2	533.4
한국(2008)	99,646	49.8	979.5
서해안권	12,641	6.2	382.5
한국+중국+일본	9,984,411	1,512.1	12,306.1
환황해권(%)	797,134 (8.0)	405.4 (26.8*	3,615.5 (29.4)

자료 : 국토해양부. 2011. 새만금 복합도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환황해권(한중일)상생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연구. p.24에서 재인용.

○ 그러나 Gilbert Rozman(2010) 교수는 동북아 지역 국지권을 8개로 구분하고, 초국경 협력 및 지역공동체 형성을 평가하였음.

– 중·한 황해권은 서울–인천과 베이징–텐진을 핵심으로 경제교류가 가장 활발한 지역이나 ①가장큰 문제는 정치 ②중국기술향상과 자국기업 경쟁력 강화로 연개 노동분업과 세력유지가 가능할지 의문 ③비전공유와 거버넌스 체제 개선에 대한 중국 태도 여하에 따라 장래가 결정 ④그러나 한중일 협력이나 초국경 도시간 협력에 중국은 여전히 소극적이라고 평가하였음.

〈표 4〉 Gilbert Rozman(2010) 교수의 초국경 협력 및 지역공동체 형성 평가

국지권	비 전	신 뢰	리더십	사회적다양성
중–한 환황해권	공유비전 의문	상대적 고	지자체적극, 다자주의 취약	상대적 높음
중–러접경지역	공유비전 무	저	취약	저
중–러–북 회랑	의문스러운 비전	저	일방적	저
러–일해양권	공유비전 무	저	결여	저
남–북–일해양지역	공유비전 무	매우 취약	매우 취약	매우 낮음
중–북 접경지역	공유비전무, 중국의 야심	매우 취약	일방적	매우 낮음
한–일해협권	형성중		상대적 강	고
중–일해양권	공유지번 무	저	취약	중간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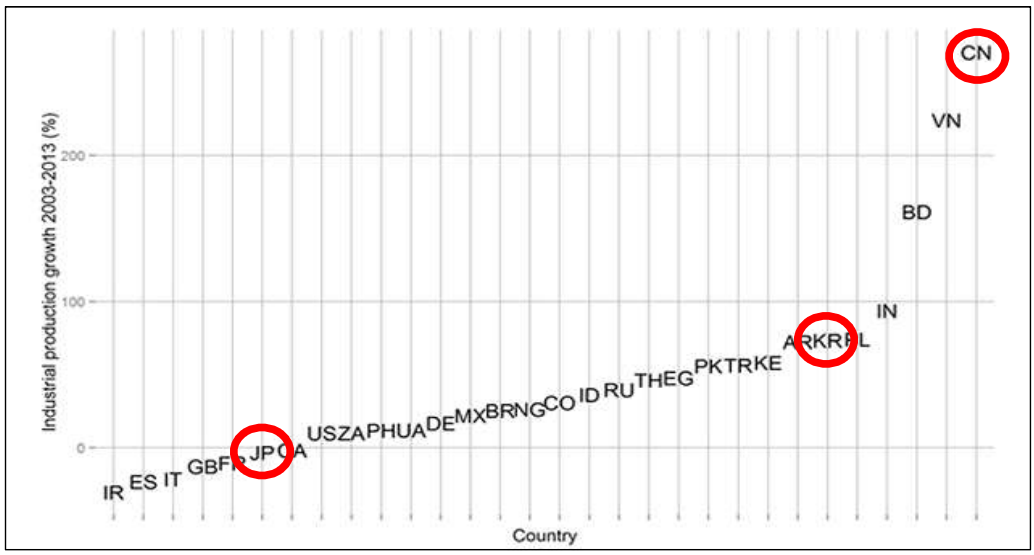
자료 : 김원배. 2012. 대국굴기와 한반도 : 동북지구를 중심으로. 국토연구원 2011년 제4차 한반도포럼 발제자료.

3. '환황해권 시대' 도래의 의미

○ 물리적 실체로서 환황해권은 과거부터 존재하던 바인데, 21세기 초반인 지금 시점에서 우리는 왜 '환황해권 시대'를 이야기하는가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함. 즉 작금의 세계 경제, 정치, 문화 각 측면에서 '환황해권 시대'은 어떠한 의미를 갖는가?

○ '환황해권 시대'의 도래라는 말에는 몇 가지 의미가 혼재되어 있음. 즉 ① 한·중·일 등 환황해 인접 국가들의 경제가 글로벌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의 상승, ② 환황해권 역내 무역이 글로벌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의 상승, ③ 글로벌 경제의 소비지로서 환황해권의 부상 등 의미가 있음

○ 환황해권 국가인 한·중·일의 경제가 글로벌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3.5%(1983, GDP)에서 20.8%(2013, GDP)로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 중 국가별로는 중국이 성장세를 주도하고 있음[7](2%, 1983 → 12.2%, 2013)



[그림 3] 국가 간 산업생산 성장률 비교(2003-2013)

자료 : Economist Intelligence Unit(http://www.eiu.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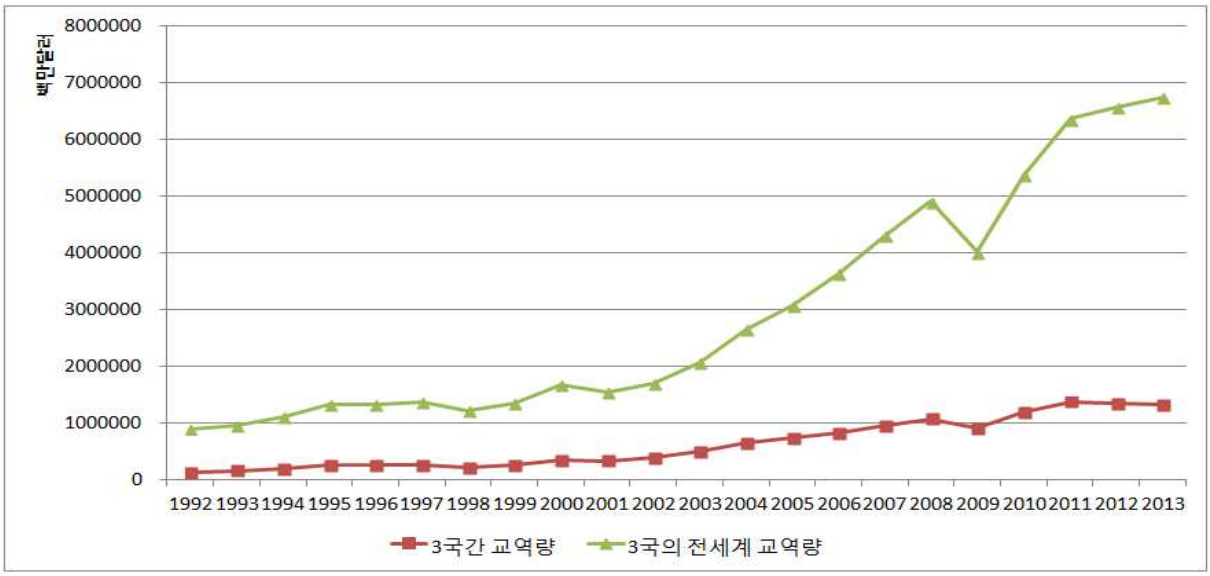
○ 환황해권 국가 간 역내 무역의 비중은 14.2%(1992)에서 19.6%(2013)로 급성장하여 글로벌 무역의 주요 권역으로 부상함[8]. 동기간내 3국의 전 세계 교역액은 652% 성장하였으며, 3국간 교역량은 937.2% 증가함.

– 국가별로는 중국의 교역액 증가율은 1,808.2%, 일본 586.1%, 한국 764.5%에 달함

---

7) GDP를 국가별로 살펴보면, 1983년 기준 전 세계 GDP 11조 6,002억 달러 중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2.0%, 일본 10.5%, 한국 0.8%로 나타났고, 2013년에는 전 세계 GDP 75조 6,218억 달러 중 중국이 12.2%, 일본 6.5%, 한국 1.7%에 달함.(World bank).

8) 한·중·일 3국의 전 세계 교역액은 1992년 기준 8,950억 달러였으며, 그 중 3국간 교역액은 127억 달러로 그 비중은 14.2%를 차지함. 2013년 기준으로 6조 7,300억 달러 중 3국간 교역액은 1,319억 달러로 그 비중은 19.6%에 달함(UNcomtrade).



[그림 4] 한·중·일 3국간 교역량 비중(1992-2013)

○ 그러나 가장 큰 변화는 세계의 소비지가 과거 미국이나 유럽에서 중국으로 바뀌고 있다는 점으로, 중국이 세계의 소비지로서 글로벌 경제성장의 축으로 자리 잡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음. 단, 이는 전통적 소비지인 미국이나 유럽을 대체한다기보다 하나의 새로운 축으로 부상하고 있다는 의미로 이해해야 함

- 전세계 수입중 중국의 수입은 2001년 3.9%에서 2014년 13.4%로 증가함.[9)]

○ 결국 '환황해권 시대'의 도래는 핵심적으로 중국경제의 성장과 그 역할이 세계의 생산거점에서 소비거점으로 전환하는 것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음

[세계 경제성장의 동력에 대한 이해]

○ 우리는 경제성장의 생산 측면에서 이해하는 데 익숙해져 있는데, 가령 세계경제의 성장이 생산활동이 가장 왕성한 지역이 글로벌 경제 성장의 견인차가 된다는 편견을 가지고 있음

○ 그러나 생산과잉이 만연한 글로벌 경제에서 경제성장의 동력은 생산된 재화와 서비스를 소비해 줄 수 있는 구매력이 있는 지역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

○ 20세기 2차 세계대전이래 미국은 대다수 국가가 생산한 재화와 서비스를 소비하는 국가로서 세계경제성장을 이끌어 왔으며, 따라서 미국은 그 거대한 소비력으로 인해 세계경제의 유지와 성장에 결정적 공헌을 했음

○ 특히 미국은 소비력뿐 아니라 과학기술 및 혁신활동에 있어서 세계경제의 성장을 주도했으며 이것이 바로 팍스아메리카나(Pax Americana)의 물질적 기초가 되었음

○ 중국이 향후 세계 경제성장의 동력이 될 것이라는 전망은 중국이 생산기지로서뿐 아니라, 기존 경제성장의 성과를 바탕으로 형성된 거대한 중산층과 정부가 성장한 소비력을 통해 세계 각국이 생산하는 재화와 서비스를 구매할 것이라는 기대에 기반하고 있음

9) 2001년 기준 전 세계 수입액 6조 2,696억 달러 중 중국 수입은 2,435억 달러로 그 비중은 3.9%였으나, 2014년 기준 전 세계 수입액 14조 6,433억 달러 중 중국 수입은 1조 9,580억 달러로 그 비중은 13.4%로 동기간내 134%의 성장률을 보임.(UNcomtrade)

○ 이는 기존 한·중·일 3국 간 국제분업구도에 근본적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는 바, 중국이 일본과 한국으로부터 소재와 부품을 수입하고 이를 가공·조립하여 북미와 유럽에 수출하던 것에서 중국의 내수시장 수요에 대해 각국이 경쟁하는 구도로 전환함을 의미.

○ 또한 중국의 구매력 확대는 한국의 경제성장에 유리한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나, 동시에 한·중·일 간 기술격차 축소에 따른 산업경쟁도 한층 치열하게 진행될 예정임.

○ 전반적으로는 이러한 경쟁과 협력은 환황해권 경제성장과 역내 무역을 더욱 증대시키는 방향으로 진행될 것이며, 한국이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는지는 이러한 경쟁과 협력에서 한국의 포지셔닝을 어떻게 하느냐에 의존함.

○ 지역 차원에서 보면, 중국의 경제성장은 사실상 중국의 연해지역이 주도했으며, 이들 지역은 중국에서 가장 활력이 있고 경제수준이 높은 지역임. 한국 또한 동남권 주력산업이 둔화하는 가운데, 서해안권 지자체의 성장세가 두드러짐. 특히 충남은 이러한 발전축의 이동에서 가장 많은 수혜를 입고 있는 지자체임.

○ 일본의 경우, 도쿄와 오사카 권역에 이은 제2의 경제권역으로서 키타큐슈에서 자동차 부품 산업과 반도체 산업을 중심으로 공업화가 진행 중임.

[역사는 반복되는가? 21세기 환황해권 시대와 과거와의 차별성]

○ 19세기 중엽까지도 중국은 동아시아의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 국가였으며, 이는 중화사상으로 집약적으로 표현되었음

○ 중국은 고도로 발달한 농업문명을 기반으로 동아시아 국가들 중 모든 분야에서 중심적 위치를 차지하였고, 이는 정치, 문화적 패권의 경제적 기반을 제공

○ 당시 중국과 이웃나라와의 관계는 중심과 변방의 관계였으며, 무역에 있어서도 조공무역이 주요한 교역형태의 하나였으며, 사(私)무역은 접경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그 품목 또한 토산품 위주였음

○ 그러나 19세기 중엽 이래 중국, 일본, 한국은 근대화 과정으로 소용돌이에 휩쓸리게 되었고, 지난 150년 간은 동아시아 국가들의 근대화와 이에 따른 새로운 국제질서로의 편입과정이었음

○ 사회주의 혁명을 거쳐 동아시아 3국 중 가장 늦게 근대화 물결에 합류한 중국은 지난 30년 간 눈부신 경제성장을 이루었으며, 경제규모로는 이미 일본을 제치고 세계2위의 경제대국으로 자리 잡음

○ 이 과정에서 중국은 근대화 후발주자로서 미국, 일본 등 해양세력이 주도하는 세계질서에 편입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중국과 이웃나라와의 관계는 과거의 수직적 관계(또는 주종관계)가 아니라 형식적이나마 수평적 관계로 정립되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분야에서 중국은 여전히 추격성장의 과정에 있으며, 경제규모를 제외한 정치, 문화 측면에서 아직 과거와 같은 중심국의 지위를 회복할 것이라고 단언하기에는 시기상조임

○ 따라서 비록 중국의 경제성장이 과거 중국 중심의 동아시아 질서로 회귀하는 듯한 모습을 보일지라도 그 본질상 현재와 과거는 상이한 차이를 보이고 있음

4. 환황해권 초국경 협력네트워크 구축과 대응과제

○ OECD(2010)에 따르면, 한국, 중국, 일본은 '환황해권'을 중심으로 긴밀한 산업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세계무역에 대한 Share를 점차적으로 확대중임.

○ 환황해권 내 지역통합이 시작된 것은 1990년대 이래 지방자치권 강화와 세계화의 물결 속에 기업부문이 국경을 사이에 둔 지역간 경제적 상호보완성을 이용해 이익을 추구하면서 부터임. 경제통합에 뒤이어 환황해권내 다른 여러부문에서도 광범위한 지역간 네트워크가 형성되기 시작했음(OECD, 2010;55).

– 생산네트워크 → 운송 네트워크 → 사회문화적 네트워크 → 환경네트워크로 이행

〈표 5〉 환황해권 초국경적 협력 네트워크 구축현황과 대응과제

구분	현 황	대응과제
생산네트워크 (하드인프라)	•남북무역형태에서 산업내무역 •초국경적 생산네트워크 발전 •수평적 분업형태로 착근 •조선, 자동차, 전자, 철강에 강세 •개구리도약형 모델로 진화 •수출구조간 동조화 및 경쟁심화 •동종산업 내 부품 및 부분재 역내교류 증가 •가치사슬상류부분으로의 이동뚜렷	•환황해권경제발전에 대한 지방·중앙정부간 관심의 차이 •지역내 지방정부들간 과열 경쟁 •지역내 투자저조(소규모 노동집약적 제조, 투자흐름 비대칭) •지식자산공유기반 취약(기술 및 서비스표준화 선결과제)
운송망통합 (소프트인프라)	•항공/해상운송에 의존(남북분단) •항공이용객 및 여객선 이용객 증가 •해상운송(컨테이너 화물운송)이 상품운송의 핵심 •역내 허브항만을 위한 경쟁치열 •혁신적 해상교통시스템 개발 •중앙/지방정부의 항만물류 지원강화 •항공화물의 증가	•일일비즈니스권 확대(항만서비스 제고, 초고속열차/고속도로 이용 도시와 배우지역 연결) •멀티허브형 항만시스템 구축(자체틈새시장 확보, 초국경 운송정책협력 필요) •고부가가치 물류기능 향상 •수출량과 수입량의 균형(새로운 교역상품개발, 경제/무역/교통부문간 수평적 협력관계 도모) •항만배후지역 확대(복합운송 향상) •초국경적 제도통합 가속화(물류표준화)
사회문화적 네트워크	•역사적 연계통해 사회적자산(문화적 연계) 축적 •근로자 및 유학생 등 인적자원 교류 증가 •관광을 통한 인적/문화적 교류증진 •학술기관을 통한 인적/지적자원 교류	•언어장벽 해체 •외국인 위한 생활환경 및 관광편의 개선 •관광 불균형 시정, 지역별 브랜드화 추구 •다자간 학문연계 추진(경제, 교통, 환경 등에 대한 공동연구 및 공동특허활성화, 싱크탱크간 네트워크 구축)
환경협력	•기상변화에 취약에 지역입지 •대기, 수질 등 초국경적 환경문제해결 위한 다자간 협력틀 마련 •주요도시간 공통의 환경문제 극복경험 •환황해권 내 양자간 환경협력 •기후변화에 대응한 초국경 지역네트워크 구축협력	•수평적/수직적 협력구조 강화 •기후변화문제를 전담하는 지역기반 기틀 구축 •이해당사자들의 참여 확대(시민의 적극적인 참여유도)

자료: OECD. 2010. 환황해권 초국경도시간 협력(번역본). pp.55-156을 정리.

○ 향후 중국 연해지역으로의 산업집적, 세계적 기업들의 연계증가 및 환황해권지역에 대한 투자증가, 동북아지역의 산업 및 경제네트워크 환경변화 등으로 3국의 역내 의존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국토해양부, 2011:52).

Ⅲ. 국내외 초국경 협력정책 및 네트워크 동향

1. 중앙정부 차원[10)]

1) 발트해지역(Baltic Sea Region)

○ 발트해지역은 한자동맹(Hanse League) 덕분에 북유럽과 발트해 지역의 도시간 연계가 활발해졌고, 해상무역이 발전하면서 도시들이 크게 번성했음.
○ 발트해는 세계 최대의 염해라는 점에서 생태학적으로 취약한 동시에 독특한 특징을 지님. 발트해의 해양환경에 대한 우려는 이 지역의 다양한 환경보호 활동을 통해 꾸준히 제기됨.
○ 발트해 지역 10개국은 유럽위원회의와 함께 발트해 21(Baltic 21)을 수립하였고, 발트해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공동의 목표를 채택한 세계 최초의 지역이 되었음.
○ 발트해지역 유럽연합전략(EUSBSR)은 유럽 최초의 광역지역전략이며, 11개의 EU국가와 3개의 EU인접국가가 참가하고 있음.

[그림 5] 발트해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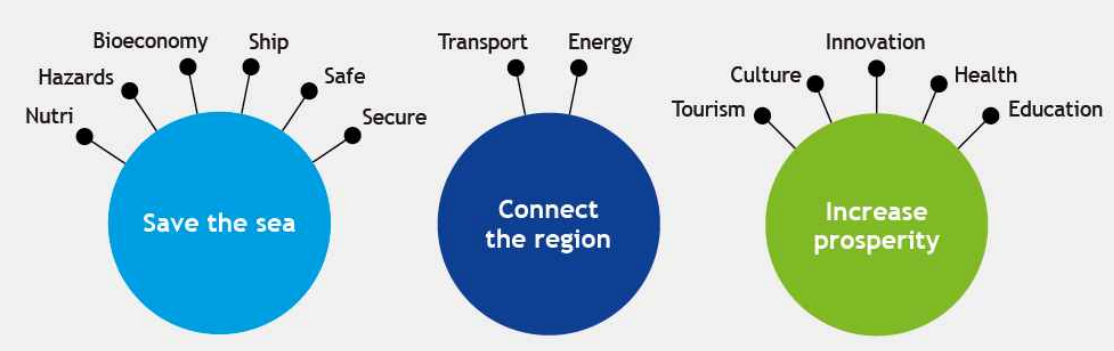
10) 중앙정부가 독립적으로 추진하는 것 뿐 아니라, 지방정부 및 도시정부, 민간 등이 협력하여 추진하는 것까지 포함.

- EU국가로는 스웨덴, 덴마크, 에스토니아, 독일,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폴란드 등 8개국이며, 8천 5백만인구(EU인구의 17%)를 보유하고 있으며, EU인접국가는 러시아, 노르웨이, 벨라루스 등 3개국임.
- 발트해지역은 과거 공산주의 국가와 서구 자본주의 국가가 혼재해 있어 환황해지역과 체제나 성격면에서 유사함

○ EU 발트해 지역의 3대 전략목표 및 하위요소

전략목표		하위요소
해양의 보전	2020년 양호한 환경지위 달성	청정해양, 풍부하고 건강한 야생동물, 깨끗하고 안전한 항해
지역간 교류협력	역내 수송망 및 인적교류 개선	운송조건개선, 신뢰할 수 있는 에너지시장, 역내 인적교류, 초국경간 범죄퇴치 공조
지역발전	역내 경쟁력과 매력의 증진	단일시장의 심화, 유로2020전략 이행, 발트해지역 국제경쟁력 개선,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 위험예방 및 관리

자료: EUSBSR. 2014. A Beginner's Guide to the Baltic Sea Region Strateg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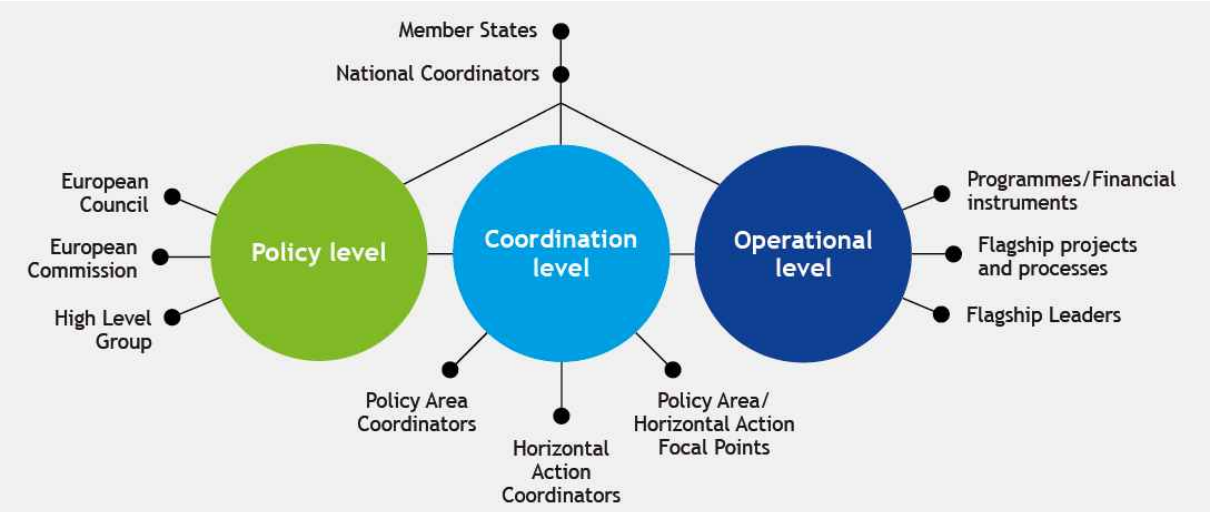


[그림 6] 발트해지역 목표 및 정책영역

자료: http://www.balticsea-region-strategy.eu/(2015년 5월 30일 접속)

○ 발트해 지역의 거버넌스 체계

- 발트해 지역의 거버넌스 체계는 정책수준, 조정수준, 실행수준에 따라
- 정책수준에서는 유럽연합이사회, 유럽연합집행위원회, 높은수준의 그룹, 조정수준에서는 정책영역 조정, 수평적실행조정, 정책영역/수평적실행촛점, 실행수준에서는 프로그램/재원, 선도프로젝트, 핵심리더 등간의 거버넌스체계를 구축함.
- 발트해지역의 강점은 국가차원의 발트해연안국협의회(council of the baltic sea states), 지역차원의 발트해연안국지역협력(baltic sea states sub-regional co-operation), 도시차원의 발트해도시연맹 및 발트해연안대도시포럼 등 모든 차원의 기구가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는 데 있음.



[그림 7] 발트해지역 거버넌스체계

자료: http://www.balticsea-region-strategy.eu/(2015년 5월 30일 접속)

2) 지중해연합(Union for the Mediterranean : UfM)

○ 2008년 프랑스 사르코지 대통령의 지중해권 블럭주장을 계기로 "지중해연합"을 출범

- EU 28개국과 지중해 연안의 중동 및 북아프리카국가 15개국 등 43개국이 해양자원, 해양한경, 해양안보, 해상운송 분야 등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

[그림 8] 지중해 연합

자료: 한국경제매거진, 2008.7.28(http://magazine.hankyung.com)

○ 지중해연합의 기본구상은 1995년부터 추진된 EU-지중해 국가간 경제협력 활성화를 위한 “Barcelona Process”에서 비롯된 것으로보다 발전된 형태의 지중해연합이 출범하게 된 것임. EU는 지중해 연안국과 2010년 이내 자유무역지대 조성을 위해 “Barcelona Process”를 추진해 왔으나, 남유럽의 정치적 갈등, 추진의지 부족 등으로 EU와 개별국가간 양자무역협정에 의해 수입관세 등이 부과되고 있는 상태임

○ 특히, 종교, 문화적으로 갈등을 빚고 있는 중동지역을 포괄하는 지중해연합은 당초 프랑스를 주축으로 남유럽과 중동·아프리카 국가간 경제협력체를 구성하려는 움직임이었으나, 메르켈 독일총리가 지중해연합이 EU회원국의 남-북유럽간 경제통합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제기함에 따라 EU회원국(27개국) 모두 지중해연합에 편입하는데 합의함(한국수출입은행, 2008:8-9).

○ 비전

- 지중해연합은 유럽과 지중해국가간 지역통합과 단결가능성을 증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한 다자간 협력임.
- 지중해연합은 평화, 민주주의, 협력과 번영의 지역으로 지중해를 변화시키기 위해 공유정치를 통해 활성화함.

○ 미션과 권한

- 지중해 오염의 저감, 바다 및 육상고속도로, 시민보호, 대안 에너지: 지중해 솔라플랜, 지중해비즈니스 이니셔티브

○ 6대 핵심영역

- 비즈니스개발(Business Development), 수송 및 도시개발(Transport & Urban Development), 에너지(Energy), 환경 및 수자원(Water & Environment), 고등교육 및 연구(Higher Education & Research), 사회 및 민간업무(Social & Civil Affairs) 등

3) 환황해경제·기술교류회의

○ 개최배경

- 환황해경제·기술교류회의는 2000년 ASEAN+3 정상회의에서의 한중일 3국간 경제협력증진에 대한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환황해권 경제·기술교류 협력강화를 위하여 제안
- 한국 서남해안 지역과 중국 환황해지역 3시·4성·일본큐슈지역 7현·3정령시간 경제교류를 통해 삼국간 무역, 투자, 산업기술협력의 확대를 도모

○ 개최현황

- 2001년 1월 제1회 환황해 경제기술교류회의를 개최한 이래 매년 한중일 3국이 번갈아 가면서 개최
- 제1회 회의(2001년 1월, 일본 후쿠오카시), 제12회 회의(2013년 11월, 중국 롄윈강시)

○ 환황해지역

– 한국(서남해안 11개도시) : 부산, 인천, 광주, 대전, 경기, 충북, 충남, 전남, 전북, 경남, 제주

– 중국(환황해 회의 : 3시 4성) : 베이징, 텐진, 상하이, 랴오닝, 허베이, 산둥, 장쑤성

– 일본(큐슈지역 7개현 3정령시): 후쿠오카, 사가,, 나가사키, 구마모토, 오이타, 미야자키, 가고시마의 7현 및 후쿠오카, 기타큐슈, 구마모토 등 3정령시

○ 목적

– 한중일 삼국의 각 지역이 보유하고 있는 자금, 기술, 인재 등 지역자원을 상호보완하여 무역, 투자, 산업기술교류화대와 지역간 교류를 촉진

○ 성과

– 지난 13년간 한국 1,175명, 중국 1,506명, 일본 1,662명 등 총 4,343명이 참가하여 비즈니스포럼, 대학총장포럼, 항만물류포럼 등을 통해 141건의 경제협력 사업 제안 및 실천

〈표 6〉 환황해경제·기술교류회의

구 분	개최장소	논의의제
제1회(2001)	일본 후쿠오카시	무역/투자의 촉진, 과학기술교류의 촉진, 교육/인적교류촉진
제2회(2002)	전북 전주시	무역/투자의 촉진, 과학기술교류의 촉진, 교육/인적교류촉진
제3회(2003)	중구 위해시	무역/투자의 촉진, 과학기술교류의 촉진, 교육/인적교류촉진
제4회(2004)	일본 미야자키시	무역/투자의 촉진, 과학기술교류의 촉진, 교육/인적교류촉진
제5회(2005)	한국 대전시	무역/투자의 촉진, 과학기술교류의 촉진, 교육/인적교류촉진
제6회(2006)	중국 일조시	무역/투자의 촉진, 과학기술교류의 촉진, 교육/인적교류촉진
제7회(2007)	일본 구마모토시	무역/투자의 촉진, 과학기술교류의 촉진, 교육/인적교류촉진
제8회(2008)	한국 인천시	무역/투자의 촉진, 과학기술교류의 촉진, 교육/인적교류촉진
제9회(2009)	중국 연태시	무역/투자의 촉진, 과학기술교류의 촉진, 교육/인적교류촉진
제10회(2011)	일본 기타큐슈시	한중일 산업구조 고도화
제11회(2012)	한국 대전시	한중일 산업구조 고도화
제12회(2013)	중국 롄윈강시	한중일 교류확대와 녹색(순환)경제 발전, 공동의 발전촉진
제13회(2014)	일본 사세보시	경제산업 시책의 상호이해, 정부지역간 교류의 촉진, 비즈니스 교류의 성과창출

4) 한일(큐슈) 경제교류회의

○ 추진배경

– 1992년 일본 기타큐슈시에서 ‘코리아페스타’(한국우량제품전시상담회)를 개최한 것을 계기로 일본 큐슈지역과 ‘1993년 제1회 한일 경제교류회’를 개최한 이래 매년 양국이 번갈아 가며 개최(산업통상자원부, 2014;5)

○ 개최목적
- 일본 큐슈지방과의 경제교류를 통해 한·일간 무역, 투자, 산업기술 협력의 확대를 도모
- 한일 양국이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각각 보유하고 있는 자본, 기술, 인재 등의 서로 부족한 지역자원을 상호 보완하여 무역, 투자, 산업기술이 교류확대와 지역간 교류를 촉진

○ 개최현황
- 1993년 제1회 한일(큐슈) 경제교류회의 개최
- 2014년 제21회 한일(큐슈)경제교류회의 개최
- 경제산업 시책의 상호이해, 정부 및 지역간 교류의 촉진, 비즈니스교류의 성과창출

2. 지방정부 및 도시차원

1) 한일해협연안 시도현지사 교류회의

○ 1992년 한일해협연안시도현지사교류회의가 1시 3도 4현(부산광역시, 경상남도, 전라남도, 제주도, 후쿠오카현, 사가현, 나가사키현, 야마구치현)를 중심으로 출범

○ 주요 교류협력 사업
- 청소년 교류사업 : 상호방문, 역사문화유적지 탐방, 공동수련프로그램
- 지사교류회의 : 환경보전 위한 환경기술 교류사업, 산성우 공동조사, 하천수질 생물검정 공동조사사업, 육수 및 그 집수역의 질소유동 조사
- 수산관계 교류사업 : 어업지원의 공동조사와 양식기술 공동연구, 어업인의 안전조업에 관한 정보교환, 어류공동방류사업, 어업인친목교류사업, 어선의 안전조업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보교환사업
- 광역관광협의회 사업 : 관광홍보물 제작배포, 한일관광가이드북 발간, 관광설명회 개회, 배낭여행객 상로교류
- 경제교류촉진사업 : 한일해협연안 상품전식, 상담회 개최제안, 상품판매촉진단 파견, 상품구매상담회 개최, 경제교류단 파견 추진 등
- 주민친선 이벤트사업 : 전통민속예능공연과 축제교류, 아마추어 스포츠교류
- 지역전통공예 교류사업 : 전통공예인 교류사업, 공동팜플랫제작과 기술융화사업, 전시판매
- 연구기관 공동연구사업 : 한일해협권 지역산업의 상호교류촉진 방안, 한일해협권의 비교연구 등 공동연구 등
- 지역진흥단체 교류지원사업 : 여성정책전문단체 교류
- 기타 : 방재교류사업, 과학기술분야교류사업, 친환경농업분야 기술/정보교류사업, 만화페스티벌 등 제안

2) 환동해권 지방정부 지사성장회의

○ 1990년대 초반 동북아지역에 화해와 협력이라는 탈냉전적 국제환경이 조성되면서 냉전시기 최대 피해지역이었던 동해와 면한 지역의 지방정부들이 지역간 교류와 협력을 통해 공동발전을 도모하고자 1994년 강원도, 중국 길림성, 일본 돗토리현, 러시아 연해주 등 4개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결정

- 1999년 제6차회의에서 몽골의 중앙도가 회원으로 가입하면서, 5개국 5개 지방정부가 회원단체로 활동

○ 주요 교류협력사업

- 관광촉진협의회 : 각 지역의 관광정보에 대한 정례/수시교환과 두만강 지역의 관광자원 개발, 해상항로(속초-나진-훈춘)를 이용한 환동해권 다국관광 전개, 지역간 관광사증수속의 전개 추진
- 경제협의회 : 육해공 운송네트워크 구축 등 경제교류기반조성과 지역간 홈페이지 개설 및 사이버무역박람회 등 개최

3)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NEAR : The Association of North East Asia Regional Governments)

○ 동북아시아지역의 공동발전 및 교류협력을 위해 6개국 광역자치단체, 즉 주(州), 성(省), 도(道), 현(縣), 아이막(Imag), 광역시(metropolitan city)로 구성된 동북아의 독립적인 지방협력기구.

- 1996년 9월 창설이래, 중국, 일본, 한국, 몽골, 북한, 러시아(6개국)의 73개 광역자치단체 회원과 4억4600만 명의 인구를 포용하고 있으며, 5개 옵저버 자치단체, 2개의 국제지역협력기구(AER, R20)와 지역의 전문연구소 등을 파트너로 하여 교류, 협력

○ 창설배경

- 대립과 긴장에서 우호와 협력으로
- 세계경제의 뉴트런티어 부상과 동북아의 상호결속 요청
- 21세기를 향한 동북아 교류협력의 중심 국제기구 필요성 증대

○ 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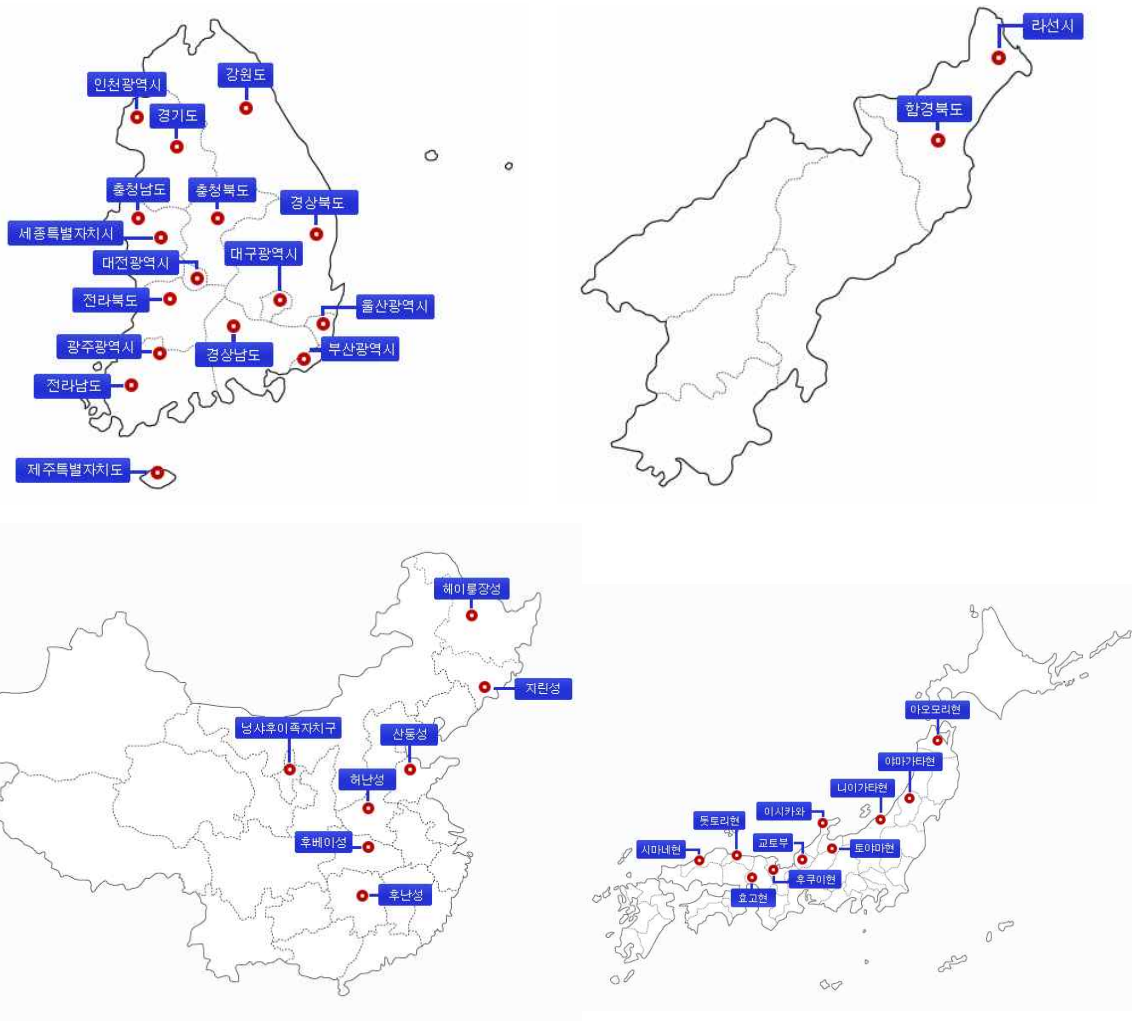
- 세계 3대 경제축을 형성하며 <세계의 중심>으로 부상하고 있는 동북아시아는 상호간 다양한 분야의 활발한 교류협력 활동으로 동북아시아지역의 공동발전 가능성이 증대 되고 있음.

"〈연합〉은 동북아시아지역의 자치단체들이 호혜·평등의 정신을 바탕으로 모든 자치단체 간의 교류와 협력네트워크를 형성함으로써 상호이해에 입각한 신뢰관계를 구축하여 동북아시아지역 전체의 공동발전을 지향함과 동시에 세계평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연합헌장제1장제2조)

○ 임무

- 동북아지역 간 교류 활성화 및 결속 강화
  - 동북아시아 전 지역에 대한 성장파트너
  - 동북아지역 간 지식과 경험 교류 촉진 및 지원
  - 미래를 위한 청년 참여활동을 촉진 및 지원
- 동북아시아 공동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모색
  - 동북아지역에서 균형 잡힌 성장전략을 촉진
  - 회원단체에 자문, 전문지식, 정보, 활동프로그램을 제공하며 회원단체가 직면한 사회, 문화, 경제, 환경문제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
- 국제협력네트워크를 통한 국제경쟁력강화에 기여
  - NEAR 가치와 부합하는 다른 유관기관, 공공기관, 민간기업 파트너십 활용
  - NEAR 이미지를 대외적으로 고취시키기 위한 관련 네트워크 단체와 지방사회경제 활동가들 및 정치인들을 참여

○ 회원단체



[그림 9] NEAR회원단체(www.neargov.org)

○ 사무국

- 1996년 창설 이래 2년 임기의 의장단체가 사무국 운영을 병행하는 순회사무국 운영 방식
- 2004년 4년 임기제 상설사무국 운영 합의, 경상북도 상설사무국 유치 제안, 합의하였고, 운영예산은 경상북도가 전액 부담
- 2012년에는 상설사무국을 대한민국 경상북도에 두는 것으로 합의 일관성, 지속성확보
- 현재 17명의 상근 및 파견인원 합동근무, 운영비는 연간 100만달러(한화 11억원/600만위엔/1억2,000만원 상당)내외, 경상북도와 포항시가 부담

3) 동아시아경제교류추진기구(OEAED)[11]

○ 창설

– 2004년 11월 16일 환황해경제권 발전을 위한 지방으로부터 도전의 일환으로 3국의 10대 도시의 시장(행정)과 경제계 대표(민간)가 일본 기타큐슈에 모여 동아시아 경제교류추진기구를 창설(The Organization for the East Asia Economic Development)를 창설

○ 목적

– 도시의 연대, 경제교류, 상호네트워크 강화를 비롯하여 경제활동 및 도시간 교류의 활성화 추진, 환황해지역에 있어서의 새로운 광역 경제권 형성과 함께 동아시아경제권의 발전에 공헌

○ 회원도시

– 한국의 부산, 인천, 울산, 중국의 대련, 텐진, 연대, 청도, 일본의 후쿠오카, 기타큐슈, 시모노세키 10개 도시

○ 회원단체

– 부산상공회의소, 중국국제상회 대련상회, 후쿠오카상공회의소, 인천상공회의소, 기타큐슈상공회의소, 중국국제 상화 청도상회, 시모노세키상공회이소, 중국국제상히 천진상회, 울산상공회의소, 중국국제상회 연대상회

○ 5대 중점과제

– 지역 한정판 '동아시아 FTA'창설 추진 : 2개국간 FTA협상에 있어서도 농업문제 등으로 인해 교착상태에 빠져 있는 점을 감안하여 지방정부가 관여할 수 없는 관세문제를 제외하고, 지방도시간에서 물류의 흐름을 순조롭게 하는 시스템(통관수속의 간소화, 코스트 절감, 항만 사용료 및 착륙료 우대조치 등)을 만들어 FTA와 같은 효과를 낳도록 함.

– 환황해 환경모델지역 창출 : 환경에 대한 배려와 산업활동의 양립을 도모하여 새로운 순환형 사회를 창출함으로써 환황해지역이 "세계의 환경모델 지역"이 되도록 함

– 뉴 비즈니스 창출시스템 구축 : 국경의 넘어선 산업클러스터 육성과 이를 지원하는 시스템 구축을 추진함과 동시에 환황해 10개 도시간 규제완화 실현과 비즈니스환경 정비에 주력

– 환황해 관광브랜드 전략 전개 : 환황해 역내외로부터의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환황해의 해" 등 대형 캠페인을 전개하여 세계를 향해 정보를 발신함으로써 환황해 브랜드를 확립

– 기술교류·인재육성 플랫폼 형성 : 회원도시에 있는 기술계 주요대학간 공동연구나 단위 호환성을 비롯하여 학술교류를 추진하는 한편 산학협력 기관을 네트워크화하여

11) 동아시아 경제교류 추진기구(http://www.oeaed.com/kr/outline/, 2015년 5월 27일 접속)

국제적 산학협력을 추진

○ 환황해 ACTION의 수행

- 환황해 ACTION(Active Cooperation for Trade, Investment and Other Needs)이란 회원도시의 각 상공회의소(일본, 한국) 및 국제상호(중국)가 시내기업에 대해 3개국 내 비즈니스상의 문제점,요망사항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후, 해당 회원도시가 모든 문제점, 요망사항에 대해 개별 행동계획을 수립하여 각 시장의 책임하에 계획을 단기간에 실행하는 공동사업
- 특징 : ①각 도시 시장이 2년에 한번씩 개최하는 기구총회(11월, 청도)에서 액션플랜 실행에 관한 양해각서에 서명함므로써 실효성을 담보 ②정부레벨의 문제에 대해서도 각국의 중앙부처와의 연계를 통해 검토 ③단기간(2년간)에 문제해결을 하도록 하고 플랜의 진천상황을 정기적으로 검증 분석

자료 : 동아시아 경제교류 추진기구(http://www.oeaed.com/kr/pys_action/)

[그림 10] 동아시아경제교류추진기구 참여도시

자료: http://www.oeaed.com/guide/

3. 시사점

○ 유럽의 초국경 협력네트워크는 EU의 지역간협력프로그램(INTERREG)을 도입하면서 전개과정에 상당한 영향을 받게 되었음.
- 발트지역 사례 역시 EU의 초국경프로그램에 포함되어 있으며, 환황해권 초국경 협력네트워크 형성에 시사점을 줄 수 있는 모범사례임.
- 비전 및 전략목표, 거버넌스시스템이 체계적으로 구축되어 있음.

○ 동아시아 지역의 국제교류의 특징은 비정치적 영역에서의 교류와 협력을 통한 공동번영을 추구하고 있음. 경제교류와 협력에 중점을 두고 있음.
- 동아시아 지역에서는 북한문제, 영토문제, 역사문제 등 다양한 갈등요인이 존재하고 있어 국가차원의 협력이 원활하지 않고, 지방정부간 교류와 협력에도 이러한 점들이 영향을 미치기 때문임.

○ 동아시아 지역의 국제교류는 짧은 역사성으로 인해 기구의 조직구조와 운영시스템 및 협력사업들이 아직까지 미흡함
- 지방정부의 국제협력에 대한 경험이나 지식, 사전분비가 미흡한 상황에서 탄생했기 때문에 많은 시행착오경험

○ 지방정부가 주도하고 기업과 민간이 참여하는 형태를 추진되고 있지만, 기업과 민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부족으로 산관학연간 연계가 미흡함
- 산관학연간 느슨한 연계로 지역기구의 활동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고, 협력사업 역시 구체적인 성과창출로 연결되지 못하며, 지속적인 교류협력에도 부정적임

○ NEAR는 지역 최대의 지방정부가 중심이 되는 국제기구로 성장하고 있음. 분과위원회를 중심으로 다양한 협력프로젝트를 제안 및 추진해오고 있으며, 회원단체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정보교류 및 구체적인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협력 프로젝트 개발화 활성화를 지향하고 있음
- 경북 포항시에 사무국이 입지해 있고, 회원단체에서 직원을 파견하여 근무하고 있으며, 비교적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다는 차원에서 앞에서 살펴본 지방정부가 주도하는 교류협력기구 중에서는 가장 활성화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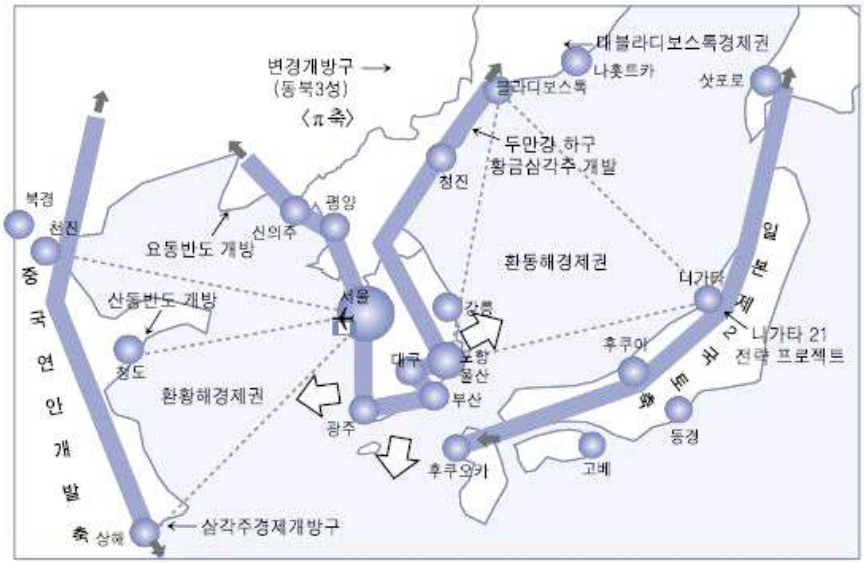
Ⅳ. 환황해권 도래에 따른 충남의 대응전략

1. 환황해권의 미래 전망

1) 환황해권 초국경적 협력강화 전망

○ 한중일 3국의 국토발전축은 우리 나라를 기준으로 보았을 때 환황해권, 환동해권 및 한일해협권을 중심으로 점차 강화되어 가고 있음.

– 우리 나라 서해안 지역의 경우 환황해 지역에 속하는 중국연안 지역이 지역발전전략 수립에 큰 영향을 미치며, 이 지역에서의 성장동력 창출과 협력이 미래발전으로 관건으로 자리잡고 있음(장윤정. 2010; 84).



[그림 11] 한반도와 주변 국가의 국토발전축

자료: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연구자료(2008); 문정호(2009)에서 재인용.

○ 환황해지역은 유럽경제권에 비해 아직 국경의 장벽이 현실적으로 남아있고 북한과의 협력여건이 성숙하지 않아 정치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서 국가간 직접연계는 실현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할 수 있음(장윤정, 2010: 109).

– 그러나 동북아의 지역화 경향과 한중일 3국간 정책적 공조필요성이 날로 중요해지고 있음을 고려할 때 환황해 지역의 협력강화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되고 있음.

– 따라서 이러한 시대적 요구와 지리적 열세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보다 도시나 지역이 더 현실적으로 유용한 공간적 협력대상이 되고 있으므로 소경제권별 대도시 및 경제권역간 협동적 개발이 향후 환황해지역 초국경 연계협력의 주요수단으로 활용될 것으로 전망됨

○ 시대적 상황에 따라 한중일 3국의 지역발전 전략은 다른 나라의 거대지역 형성 등 지리경제적 여건을 최대한 반영하면서 동시에 자국의 성장축과 성장거점 육성을 위한 중심지 전략을 채택하고 있음

– 각국의 지역발전전략은 이미 국내 차원에서의 발전전략 운용이 아닌 국제관계 속에서의 국가 및 지역경쟁력을 고려한 개방화외 연계전략을 구체화해 가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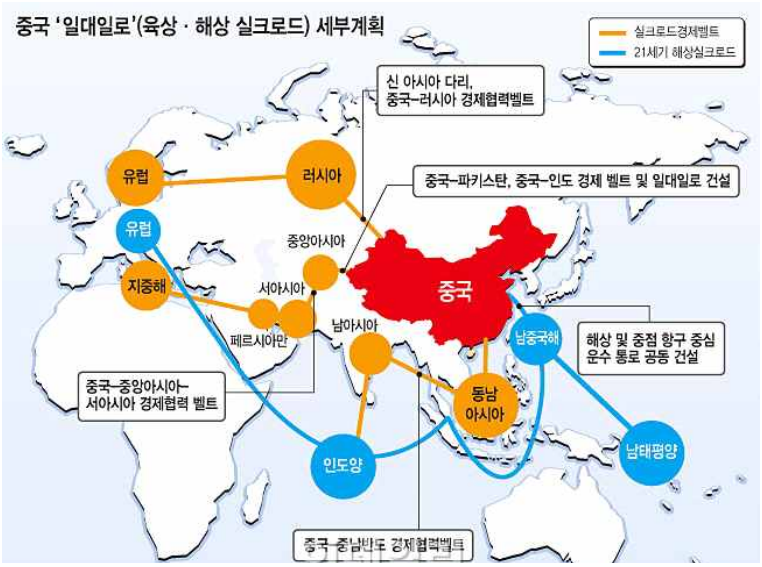
2) 중국의 국가핵심전략 변화 전망

○ 중국 정부는 2014년 12월 뉴노멀(新常态)시대[12]의 도래를 천명했으며, 실제로 각 지역도 저성장 추세가 두드러짐에 따라 2015년 1~2월에 개최된 양회(兩會)에서도 뉴노멀 시대에 대한 대응이 강조됨.

– 지방정부도 뉴노멀 시대의 시작을 인지하고 뉴노멀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전략을 추진중임.

○ 중국정부가 중국의 꿈(中國夢)을 실현하기 추진하고 있는 일대일로와 창장경제벨트 등 광역경제 통합발전계획을 구상하고 있으며, 자유무역시범구 지정을 확대하고 있음.

– 일대일로는 중국정부의 이니셔티브로서 실크로드경제벨트와 21세기 해양실크로드를 통칭하는 용어임.



자료: 이데일리 뉴스(http://www.edaily.co.kr/news). 2015. 3. 29.

[그림 12] 중국의 일대일로 세부계획

12) ①맹목적 충동 소비문화가 사라지고 개성이 반영된 다양한 소비시장 형성, ②새로운 상품과 사업모델 출현으로 투자기회 증가, ③저비용 노동집약형 산업탈피와 고도기술도입으로 해외진출, ④신흥산업·서비스업·중소기업 영향력 확대로 인한 산업의 전문화와 스마트화, ⑤인구노령화와 농업인구 감소로 인한 노동집약형 산업구조에서 기술·자본집약형 구조로의 전환가속화, ⑥품질과 차별화에 다른 시장경재 주도, ⑦저탄소 친환경 추진, ⑧거품경제의 위험성이 지속되는 과정에서 리스크 관리능력 향상, ⑨생산과잉 문제해결, 시장기능 활성화.

– 중국정부가 발표한 일대일로 프로젝트 로드맵은 육상 3개 노선, 해상 2개 노선 등 총5개 노선으로 추진(중국 → 남(중국)해 → 남태평양으로 이어지는 남선은 새롭게 등장)

〈표 7〉 중국 일대일로 신로드맵

구분	일대일로 신로드맵
일대	중국 → 중앙아시아 → 러시아 → 유럽
	중국 → 중앙아시아 → 서아시아 → 페르시아만 → 지중해
	중국 → 동남아시아 → 남아시아 → 인도양
일로	중국 → 남(중국)해 → 인도양 → 유럽
	중국 → 남(중국)해 → 남태평양

자료: 이봉길. 2015. 중국의 꿈, 일대일로 프로젝트 현황과 영향. 한국무역협회, Trade Focus. vol. 14 no.16. p.2에서 재인용.

–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지역 26개 국가와 지역의 인구 44억명(세계인구의 63%)을 직접적으로 연결(경제규모 약21억 달러로 전세계의 약29%, 상품 및 서비스수출의 23.9%차지)

– 일대일로 프로젝트를 강력하게 추진하는 이유는 첫째, 중앙아시아, 동남아시아 등 아시아 신흥시장 진출을 통해 경제성장의 동력을 확보하고, 중국의 과잉생산 및 과잉산업 문제를 해소하기 위함 둘째, 중국은 세계 최대 에너지 소비국으로 필요한 자원과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함 셋째, 일대일로는 서부대개발의 업그레이드 버전으로 중국의 지역불균형 발전과 도농격차를 해소하고 이를 바탕으로 신장 등 소수민족의 독립 움직임까지 약화시키려는 것임. 넷째, 자국의 경제영토를 중앙아시아와 동남아시아로 확대하고 나아가 미국주도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을 견제하고 지역경제 통합의 주도권을 확보하는 것(이봉길, 2015: 1~7).

– 일대일로 공동건설을 위해 주변국과의 5대 중점 합작 분야, 즉, 정책교류, 인프라 연결, 무역원활화, 자금융통, 민심상통 등을 발표

〈표 8〉 일대일로 5대 중점 협력분야와 주요내용

구 분	주요내용
정책교류	▵정부간 협력강화 ▵거시정책교류 시스템 구축 ▵대형프로젝트 정책지
인프라 연결	▵구제핵심통로 건설추진 ▵아시아인프라 네트워크 건설 ▵북족한 교통로 우선 건설 ▵항만기초인프라 건설 ▵통일된 운수협력 시스템 구축 ▵에너지 기초인프라 상호연결 및 협력강화 ▵국가간 광케이블 네트워크 건설 등
무역원활화	▵공동 자유무역지대 건설 ▵국가간 전자상거래무역 및 서비스 무역발전 ▵검영, 인증, 표준, 통계정보 등의 협력강화 ▵성실무역업체(AEO)상호 인정▵서비스업의 상호개방 확대▵신흥산업 붕야의 협력 등
자금 융통	▵아시아 통화안정 시스템 구축▵주변국 통화스왑 규모 확대 ▵결재범위와 규모 확대 ▵아시아 채권시장 개발 및 발전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과 브릭스개발은행 공동추진, 주변국 정부 및 높은 신용등급 기업의 중국내 채권 발행지지 등
민심소통	▵상호유학생 규모 확대 ▵중국 매년 1만개의 정부장학금 제공 ▵세계문화유산 공동신청 및 보호 ▵관광협력 강화 ▵실크로드 관광상품 공동개발 ▵주변국 여행비자발급 간소화 등

자료: 이봉길. 2015. 중국의 꿈, 일대일로 프로젝트 현황과 영향. 한국무역협회, Trade Focus. vol. 14 no.16. p.11에서 재인용.

○ 2013년 일대일로 프로젝트 실현을 위한 자금조달 수단 및 아시아 개도국들의 부족한 인프라 건설을 지원하기 위해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설립추진

– 전체 창립회원은 57개국이며, 우리 나라는 전체지분 중 3.5% 수준의 지분 확보한 것으로 파악(연합뉴스. 2015.5.25).

[그림 13]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가입국(57개국) 현황

자료 : 연합뉴스(http://www.yonhapnews.co.kr)

○ 2014년 일대일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지지하기 위해 실크로드기금을 설립해 40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발표

○ 일대일로의 추진으로 우리 나라에 미치는 영향 및 대응으로 우리나라 기업의 아시아 인프라 건설시장 진출 기회확대, 일대일로는 서부대개발의 업그레이드 버전으로 서부지역 진출을 강화, 아시아 지역에서 중국과의 경쟁이 치열해질 전망, 한류 및 반중 정서를 활용한 아시아 시장 진출을 적극 추진, 중국횡단철도(TCR)를 통한 중앙아시아 진출 가속화, 일대일로 프로젝트에 적극 참여하여 한중간 경제협력 강화 등을 들 수 있음(이봉길, 2015;23 ~26).

3) 환황해권 도시간 초국경 협력거버넌스 체제 강화[13)]

○ OECD정책보고서(2010)에 의하면, 환황해 지역 한중일 간에는 국경을 초월한 공급망이 확대되면서 산업연계가 강화되고 역내 무역이 증가하면서 지역간 경쟁우위와 잠재력을 활용하기 위한 노력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동시에 협력과 경쟁을 유발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음.

13) OECD. 2010. OECD지역정책 보고서: 환황해권 초국경적 도시간 협력. pp.159-192에서 정리.

○ 환황해권내 초국경 거버넌스 체제는 구축된지 얼마되지 않았지만, 민간부문이 환황해권내의 경제통합을 주도하여 활성화되고 있음. 지방정부 역시 환황해권 내 경제활동 성과를 제고하기 위해 초국경적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있음.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의 보조금에 크게 구속되지 않고 국경 밖의 타 지역과 경제적 상호보완관계를 기반으로 협력을 도모하고 있음. 환황해권내 지방정부간 양자 또는 다자간 네트워크를 구축하려는 움직임도 급속히 활발해지고 있음. 더욱 고무적인 사실은 역내 초국경적 공동체를 건설하려는 지방정치 지도자의 의지가 확고하다는 점임(OECD, 2010; 186-188).

○ 초국경 거버넌스 체계의 강화를 위한 지방정부의 제안사항은 다음과 같음.

(1) 공동의 비전수립 및 공유

○ 환황해권내 지역간 연계는 아직 초국경적 공동체 건설의 초기단계에 머물러 있는 실정임. 공동의 목표가 없으면, 국경을 초월한 협력이라 할지라도 단순한 친선교류의 반목에 불과하여 결국 지역간 연계는 불안정한 상태를 벗어날 수 없음. 합작사업은 공동의 비전을 수립하는데 훌륭한 시발점이 될 것임

- 해양물류 정보시스템 운영, 범지역적 관광웹사이트 개설 등

(2) 지역개발전략 수립시 상호보완성 도모

○ 환황해권내 대부분의 도시(지역)은 역내 타 도시보다 큰 영향을 행사하기 위해 개별적으로 개발전략을 수립하고 있음.

- 이 도시(지역)은 타국은 물론 자국의 도시들까지도 제로섬 게임에서 싸워야하는 경쟁자로 인식하는 경향

○ 중복 투자와 불필요한 경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반면, 도시간 제휴를 통한 협력은 활발하지 않음

- 예) 후쿠오카시는 기타큐슈시가 주도하는 OEAED에 가입하지 않고 있으며, 기타큐슈시는 후쿠오카시가 조직한 아시아태양도시정상회의에 사실상 참여하지 않고 있음.
- 예) 텐진, 칭다오, 부산은 물류중심지로 부상한다는 목표로 설비투자 단행 항만수용력 증대. 다롄은 동북아시아의 로테르담으로 부상하는 목표, 인천은 항공물류 허브로 도약

○ 환황해권 내 도시(지역)들은 개발전략을 수립할 때 도시(지역)간 상호보완성을 고려해야 함

- 도시(지역)고유의 장점을 특화하고 개별도시(지역) 차원이 아닌 범지역차원에서 경쟁력을 갖추도록 노력할 필요
- 관련도시(지역)간 활발한 대화통해 과도한 경쟁완화, 현재 자산을 균형있게 운용, 객관적 역량분석

(3) 환황해권내 제도화를 강력하게 추진

○ 환황해권내 3국간 법적·제도적 체계에 유사성이 클수록 초국경적 공동체 건설은 더욱 용이해짐
○ 환황해권내 도시(지역)간 네트워크 구축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자발적인 도시(지역)간 합의에 크게 의존
○ 공식화되지 않은 교류는 국내외 정치적 상황에 쉽게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자발적인 지역간 경제교류는 약화될 가능성이 있어, 지역 상호간 신뢰가 무너져 초국경적 협력관계는 불안정

(4) 환황해권내 도시(지역)협력을 위한 재원확보

○ 관련 이해당사자들을 초국경 공동체 건설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시키기 위해서는 재정적 인센티브 도입이 필요
  - EU의 Interreg프로그램이 대표적 사례, 이 프로그램은 국경이 유럽지역이 균형적 발전과 통합에 장애물이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시키는 것임(지역단위 협력, 개별사업 협력, 네트워크 협력).
○ 단순한 인적교류 및 교육관련 소규모 사업만인 지방정부의 재정지원 하에 시행되고 있음.
○ 초국경적 공동체 건립을 위한 대부분의 사업은 내외부로부터의 대규모 자금지원이 필요하고 공적개발 원조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방안도 검토
  - 기타큐슈는 일본국제협력기구의 프로그램 도움을 받아 아시아 여타국가에 기술이전 시도.
  - 한국의 국가공적개발원조기구인 한국국제협력단도 개발도상국과의 환경적 차원의 협력촉진

2. 환황해권 시대 충남의 대응전략

○ 환황해권에 위치한 중국의 거점 도시들은 모두 광역경제권 발전모델과 함께 이와 연계된 지역별 발전비전을 비교적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음. 그러나 충청남도는 각종 다양한 프로젝트와 사업이 하나의 통합된 비전 아래 추진되기 보다는 개별적으로 진행중인 경우가 대부분으로 상호연계성이 부족하고 명확한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 또한 환황해권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인식을 같이 하지만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전략도 부재한 실정임.
○ 중국의 경우 각 지역별로 경쟁대상으로 하는 대외경제권 범위가 서로 상이함. 즉, 텐진의 경우 동북아, 다롄은 북중국, 칭다오는 환황해, 상하이는 전 세계를 그 전략적

활동대상으로 선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각각의 산업구도와 도시기능도 추진전략을 서로 다르게 정립하고 있음(장윤정, 2010;116).

[그림 14] 중국의 주요 지역발전규획

자료: KIEP북경사무소. 2010. 중국지역발전정책의 현황과 특징

○ 그러나 우리나라 서해안에 위치한 각 지자체의 비전은 대부분 동북아를 그 대상으로 하고 중국 전체를 포함시키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 중국의 성장거점지역 하나가 우리나라를 넘어서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정부의 규모와 역량을 고려하지 않고 환황해권 전역을 대상으로 큰 그림만 그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 환황해권의 범위를 선행연구에서와 황해에 접한 한국, 북한, 중국, 일본의 지방정부로 할 것인지? 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톡과 인도네시아 발리까지를 포함한 광역으로 설정할 것인지가 전제되어야 함.

– 환황해권의 범위설정은 충청남도 초국경 협력이 지향하는 미션과 비전, 목표에 따라 달라져야 하고, 충청남도 초국경 협력을 위한 역량, 내용, 방법, 기대되는 성과 등이 범위설정에 앞서 면밀히 검토해야 할 것임.

○ 환황해권내에서 충남이 초국경 협력을 위한 선택지는 충남의 현재역량과 어떤 미래를 꿈꾸고 있는가를 명확히 하는데서부터 출발해야함.

– 아쉽게도 충남은 환황해권내 초국경 협력을 위해 주도권을 발휘할 수 있는 아젠다를

발굴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환황해권을 주도할 미래상도 그리지 못하고 있음.

○ 따라서, 이 글에서는 황해와 연접한 북한, 중국, 일본의 지방정부를 협력대상으로 상정하고, 선택과 집중이라는 관점에서 실현가능한 대응전략을 모색해보고자 함.

1) 환황해권 시대 지방정부 충남의 역할 : 지방외교 3.0

○ 환황해권 시대는 경제·정치·문화 등 다방면에 심원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충남도 역시 환황해권 구성원으로서 다방면에서 많은 영향을 받고, 영향을 미칠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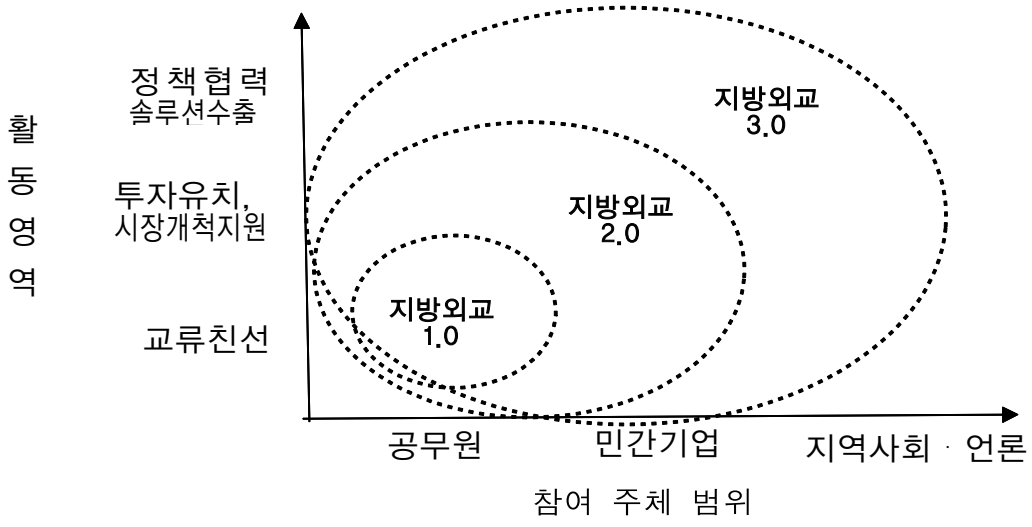
○ 지방정부로서 충남이 환황해권 시대에 어떠한 역할을 수행할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에 와 있음

- 현재 도 차원에서 환황해 프로젝트팀이 구성되어 활동 중이며, 이는 환황해권 시대 충남의 역할에 대한 본격적 논의의 시발점이 되고 있음
- 우리나라 각 지자체는 현재 중국과의 교류 협력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다양한 사업을 시도하고 있는 상황임

○ 중앙정부와 구별되는 지방정부, 민간과 구분되는 공공부문으로서 충남도의 지위와 역할을 명확히 하는 것은 환황해권 시대 지방외교의 일환으로 볼 필요가 있음

- 지방외교는 사실상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생소한 분야이나, 향후 지방분권의 본격화에 따라 지방정부 정책의 주요 영역으로 자리잡을 것으로 예상됨
- 이는 기존의 지방정부의 정책이 인적교류(지방외교1.0), 투자유치, 민간부문의 해외시장개척 지원 등의 민간 차원(지방외교2.0)에서 더 나아가 지방정부가 주체가 되는 “지방외교 3.0”을 수립해야 하는 상황임

○ 지방정부가 국제교류 촉진, 민간기업의 지원 뿐 아니라 독자적인 컨텐츠를 갖고 지역 브랜드와 가치를 제고할 수 있는 “지방외교 3.0”을 본격적으로 준비해야 함



[그림 15] 지방외교 3.0 의 개념 도해

2) 환황해권 시대 충남 외교의 집중과 선택

○ 충남은 현재 주어진 권한과 자원의 틀 내에서 전략적 교류지역 및 교류분야를 선정하여 환황해권 시대에 지방정부 충남의 주도권을 확보해야 함

- 전략적 교류지역의 선정은 상호보완성보다는 공통성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함. 산업정책 측면에서 전략적 교류지역은 보완성이 중심이 될 수 있으나, 지방외교 차원에서는 상호 공통분모가 많은 지역이 교류협력에 충실할 수 있음
- 교류분야는 다방면에서 전개될 것이나 지방외교 측면에서는 충남의 글로벌 위상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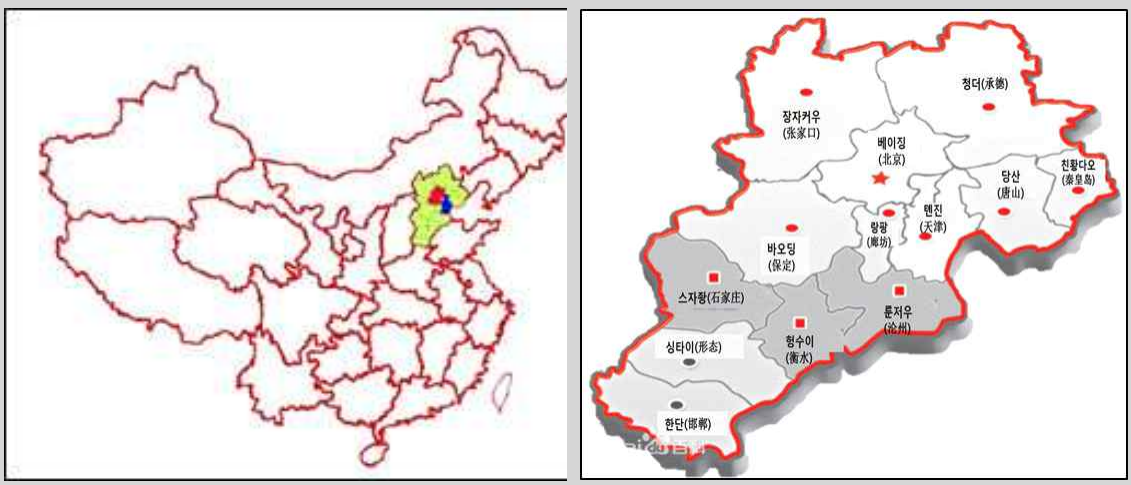
(1) 전략적 교류지역

○ 전략적 교류지역은 공통성 이외에 역사성과 경로의존성을 고려하여 중국 허베이를 중심으로 한 징진지 지역, 일본의 큐슈를 전략적 교류지역으로 삼는 것이 현실적

- 허베이는 중국의 3대경제 지역인 베이징, 텐진의 외곽에 위치하고 있으며, 허베이와 충남도는 자매결연 성으로 20년의 교류역사를 가지고 있음
- 큐슈는 백제문화를 중심으로 오랜 교류 경험이 있으며, 또한 일본경제에서 토쿄-오사카의 경제권에 이은 제2의 경제권역임

[중국 허베이를 중심으로 징진지 지역 개요]

○ 징진지는 두 개의 직할시(베이징,텐진)와 한 개의 성(허베이)을 합한 권역으로 중국 전체면적의 2.3%(21.6만㎢)를 차지하며, 총인구는 약 10,860.5만명(약7.9%)에 달함



[그림 16] 징진지의 지리적 위치

○ 2013년 징진지 지역총생산(GRDP)규모는 약6조 위안으로 중국 전체의 10.9%에 해당하며, 무역총액은 6,125.3억달러로, 중국 전체무역규모의 14.%에 달함

– 허베이는 텐진과 베이징에 비해 상대적으로 발전수준이 낮고, 발전 불균형과 산업구조 차이를 보이고 있음. 베이징 및 텐진의 1인당 GDP는 약10만 위안에 달하는 반면, 허베이 지역은 약4만 위안에 불과(2013기준)(KIEP중국사무소, 2014;3~6).

○ 충남과 자매결연지역인 허베이성의 주요정책방향은 다음과 같음

– 허베이성은 수도 베이징과 텐진(빈하이신구)과 함께 징진지 도시권으로 수입이 전국의 21.3%를 차지할 만큼 거대한 내수시장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내수중심의 무한한 발전잠재력을 가진 도시권임.

– 2014년 중앙정부는 뉴노멀(新常态, 신창타이) 시대의 도래를 천명하면서, 지방정부도 뉴노멀시대의 시작을 인지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을 추진중임.

– 2015년 지방 양회(地方两会)에서 제시된 허베이성의 키워드는 수도세 누진제, 두자녀 출산, 스모그 처리조례, 공무수행차량 구매중단, 양로, 뉴노멀, 의약개혁, 비공유경제, 국유기업 개혁, GDP, 환경보호, 민생 등임(노수연 외, 2015; 6).

○ 2014, 2015년 중국지역별 정부업무보고의 주요정책방향 중 허베이성의 주요정책방향을 검토하여 충남의 전략적 교류협력 분야를 선정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것임.

〈표 9〉 허베이성의 주요정책방향

구 분	주요정책방향
2014년	전면적 개혁심화견지, 산업구조조정, 경제지속발전 추진, 환경보호/생태건설 적극 추진, 특색신형도시화 추진, 민생강화
2015년	경제안정 촉진, 경제구조조정 견지, 지속적인 생태환경 개선, 삼농업무, 징진지 협력발전 추진, 개혁개방심화, 혁신구도발전 전략실시가속화, 민생개선 및 사회보장

자료 : 노수연 외. 2015. 뉴노멀 시대 대응을 위한 2015년 중국지역별 경제정책과 시사점. 중국권역별·성별 기초자료 15-01. 대외경제정책연구원. p.31.

[일본 큐슈지역 개요]

○ 큐슈는 인구 약 1,335만명, 지역내 총생산 약 44조엔으로서, 전국 대비 국토면적의 약 11%, 인구의 약 10%, 총생산의 약 9%로 일본의 약1할을 차지하고 있음

○ 21세기 큐슈권은 동아시아 여러 지역과 다채로운 교류 및 연계를 확대해 가고 있어 큐슈를 무대로 한 국제교류의 잠재성은 비약적으로 높아지고 있음.

○ 충청남도는 백제역사유적지구의 UNESCO세계유산 등재를 계기로 큐슈지역을 역사문화교류의 전략지역으로 설정하고 쿠마모토를 중심으로 한 지방정부와의 교류협력방안을 새롭게 모색할 필요가 있음.

– 백제문화제(공주, 부여)를 큐슈와 공동으로 주최하는 방안, 백제역사지구 세계유산 중심의 교류상품 공동개발(공주, 부여, 익산)과 충남이 주도하는 한일공동 백제사아카데미 등 새로운 교류 및 관광상품 개발

– 사가현의 도조제(무녕왕 탄생제와 이삼평의 백자창업 기념), 미야자키현의 음력 12월축제

(백제왕족의 영혼을 달래기 위하여 히끼신사와 미카도 신사가 중심이 되어 개최), 나가사키현(조선통신사 관련 쓰시마아리장 축제) 등 한국관련 역사축제

○ 현재 충남도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구마모토 아트폴리스(artpolis)프로젝트와 후쿠오카현 기타큐슈시의 세계환경수도만들기, 일본의 지역활성화 및 마을만들기 등에 대한 교류협력이 가능할 것임.

○ 일본과는 국가차원의 교류협력이 진전되지 않는 시점에서 구마모토를 중심으로 한 큐슈지역과의 교류협력은 역사문화에 중심을 두고, 충남의 수소산업을 전략적으로 연계하는 방안 모색.

- 큐슈지역의 4대 전략산업 즉, 환경/에너지산업, 차세대산업, 관광산업, 농업/지역형산업을 충남지역의 전략산업과 어떻게 연계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함.
- 특히 환경 및 에너지 산업의 선도도시인 기타큐슈시, 수소제조 및 연료전지 개발거점, 해양에너지 자원연구개발 거점인 사가현과의 교류협력을 강화함으로써 충청남도의 산업고도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임.

(2) 전략적 교류분야

○ 교류분야는 충남의 글로벌 위상에 부합하여야 하는 바, 충남은 글로벌 경제에서 위성형 신산업지구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성격을 공유하는 지역과의 협력관계 수립이 현실적임.

- 위성형 신산업지구란 글로벌 경제에서 조립가공 위주의 글로벌 생산거점을 의미하며, 충남은 전형적인 위성형 신산업지구로서 위상을 가지고 있음.
- 이러한 위상은 경제중심지인 베이징, 상하이, 서울과 구분되며, 또한 인천, 텐진 등 항만물류 도시와도 구분되는 점으로, 이에 속하는 도시는 중국의 허베이성, 산동성, 강소성 등 연안 도시, 일본의 쿠마모토현 등 지방정부와 공통점을 가지고 있음

[위성형 신산업지구란?]

○ “위성형(Satellite) 신산업지구"는 선진국 주변지역이나 개도국에 존재하는 전형적인 산업지구로서. 국지적 네트워크는 공급자연계든 고객연계든 매우 미약하고 비국지적 공급자연계와 고객연계가 항한 특징을 가짐

○ 입지 업체들은 대부분 다지역 또는 다국적 기업의 분공장이기 때문에 장거리 또는 국경을 넘어서 네트워크가 발달하며 대량생산체계가 중심을 이룸

○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의 조정기능이 존재하지만 지구 내에 입지한 업체들 간에는 상호 협력관계가 별로 이루어지지 않음

○ 따라서 취약한 지역의 정주여건, 파생되는 환경문제, 정체된 지역의 농업과 서비스업 등이 주요 현안으로 되고 있음

(출처: 박삼옥 「첨단산업발전과 신산업지구의 형성: 이론과 사례」 中)

○ 위성형 신산업지구의 성격을 갖고 있는 환황해권 도시들과의 정책네트워크를 제기하고 주도적인 협력 참여를 통해 충남도는 주도성을 확보하고 민간기업의 해외진출에 직간접적으로 공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충남은 전형적인 위성형 신산업지구로서 그 정책 경험은 해외 지방정부와의 교류 협력의 주요 콘텐츠로 작용할 수 있음

3) 환황해권 지역 산업경쟁과 협력에 있어서 충남의 역할

○ 전통적으로 산업정책은 지자체의 역할 범위 외의 업무로서 인식되었으나, 최근 지역의 고용, 일자리와 관련하여 지자체의 주요 정책분야로 되었음

– 중앙집중적 산업정책을 펴온 우리나라의 역사적 요인으로 인해 산업정책은 여전히 중앙정부의 몫으로 되어 있으며, 지방정부는 고용, 일자리 측면에서 일정한 역할을 수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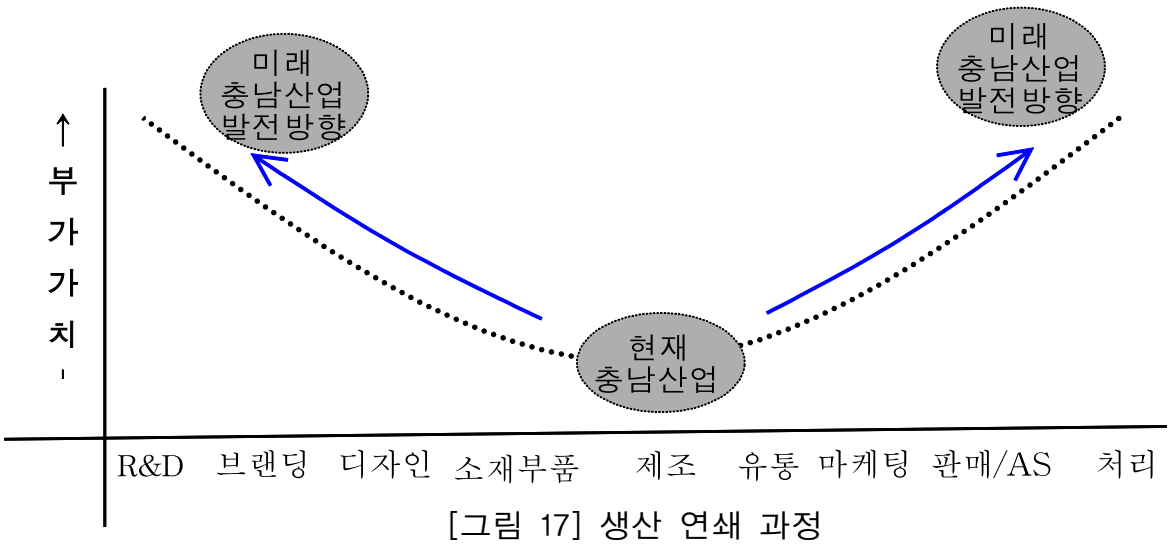
– 그러나 최근 지역혁신체계, 창조경제 등 국가산업경제의 발전에 있어서 지역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음

○ 환황해권 시대 지역 간 산업경쟁과 협력이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정부의 보다 적극적 역할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

– 한중일 산업분업이 와해되면서 지역 간 산업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임

– 과거 중앙정부가 주도하고 지역이 따라가는 모델에서 이제는 중앙과 지방이 함께 정책을 입안하고 실행하고 모니터링하는 단계로 협력수준이 높아지고 있음

– 이는 과거 집행자이자 규제자이었던 중앙정부의 역할이 규제자로서의 역할의 강화 쪽으로 전환하고 집행자는 지방정부의 역할로 자리매김해 나가고 있는 과정임



[그림 17] 생산 연쇄 과정

○ 지역간 경쟁에 직면하여 충남의 산업은 생산 연쇄의 상류(upstream)으로 나아가 R&D 또는 소재산업으로 진화하는 방향과 하류(downstream)으로 진화하는 방향의 기로에 서 있음
  - 상류로 가는 것은 R&D나 소재부품산업으로 진화하는 것으로 이는 한중일 분업구도에서는 일본과의 치열한 경쟁이 불가피함
  - 하류로 가는 것은 제품의 판매가 아닌 솔루션 또는 시스템을 파는 모델로서 한국경제의 진화의 새로운 추세로서 자리잡고 있으며, 이는 미국, 독일 등 국가와의 경쟁이 기다리고 있음
○ 충남의 산업정책은 이러한 방향모색의 플랫폼을 제기하고 논의를 활성화하여 충남 각 산업의 처한 상황에 따라 진화방향을 결정하는 것을 촉진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함
  - 과거와 같이 중앙부처와 대기업이 상의하여 결정하는 것에서 탈피하여 지역의 산업생태계 주체들이 참여하는 플랫폼(거버넌스)을 형성하고 의견을 모아나가는 것이 중요
  - 특히 충남과 같이 대기업의 수출제조업을 위주로 지역산업이 구성되어 있는 상황에서 지역의 산업생태계는 매우 취약한 구조를 갖고 있으므로 충남도의 적극적 역할이 매우 중요한 상황임
  - 또한 설정된 방향에 대해 지역차원의 거버넌스가 중앙정부와의 협력체제 아래 지역산업의 발전을 위한 공동행동을 전개하는 것이어야 함

4) 환황해권 지역 교류협력 컨텐츠의 체계화

○ 충남은 대표적인 위성형 신산업지구로서 적지 않은 정책경험과 사례를 갖고 있음
  - 중화학 공업에서 첨단산업에 이르는 다양한 제조업이 입지해 있으며, 지역차원에서 위성형 신산업지구의 다양한 문제점들에 대한 정책경험을 갖고 있음
  - 이러한 경험은 환황해권 내 유사 지역의 공통의 관심사이기도 하며, 충남의 경험은 그들에게 매우 중요한 참고사례가 될 수 있음
  - 이러한 정책경험은 서울이나 인천 등 지자체가 갖고 있는 경험보다 더 풍부하며 생생한 현장성을 갖고 있음
○ 그러나 이러한 정책경험이 국제교류의 콘텐츠로 되기 위해서는 관련 자료의 체계화가 선행되어야 함
  - 산재한 정책경험을 타 지역 지방정부에게 제공되기 위해서는 콘텐츠가 체계화되어야 할뿐만 아니라, 모듈화되어 수요자의 구체적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야 함
  - 현재 KDI가 수행하고 있는 KSP(Knowledge Sharing Program)을 지역 차원에서 수행할 수 있는 준비가 필요함
○ 이러한 정책경험의 콘텐츠화를 통해 지방정부 충남은 자체의 교류협력 콘텐츠를 확보할 뿐 아니라 관련된 기업의 해외진출에 직간접으로 기여할 수 있음
  - 이러한 정책경험은 충남도가 해외의 지방정부와 교류함에 있어서 매우 풍부한 콘텐

츠를 제공할 수 있으며,

- 내용 자체가 해외 지자체가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로서 많은 호응과 관심을 이끌어 낼수 있을 것으로 기대
- 또한 충남도의 정책경험은 관련된 협력업체나 민간기업의 참여를 통해 구현되는 것이 대부분이므로 이러한 정책협력은 이들 업체들의 해외진출에 유리한 조건을 제공

[환황해권 환경문제를 둘러싼 협력]

○ 환황해권의 환경문제는 주로 해양오염, 수질오염, 황사, 대기오염, 태풍 등으로 특히 중국 동해연안의 제조업과 중공업에 기반을 둔 산업화로 인해 야기되고 있음.

○ 지방정부 특히 위성형 신산업지구에 속하는 지역들의 다자간 협력의 틀을 마련하여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음.

- 중앙정부 차원의 논의는 정책기반과 규제에 초점이 맞추어지는 반면, 지역차원의 협력은 감사, 정책실행, 행정담당 인력의 역량 배양 등 보다 실질적인 사안을 다룸
- 환황해권 전역에서 기타큐슈시 환경도시 사례, 한국의 하천살리기 사례 등을 중국과 공유하는 것이 필요함.

○ 일본과 한국의 사례는 시민참여의 중요성을 강조함. 충청남도의 도랑살리기 사례 등도 환황해권 지방정부들간에 공유함으로써 시민들의 참여확대의 필요성 강조

5) 환황해권 연계를 위한 해상 및 항공 기반확충

○ 환황해권은 황해를 사이에 두고 있고 외교적으로 고립된 북한이 육로를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항공 및 해상운송에 크게 의존한다는 점이 특징임. 이러한 이유로 항공운송이 환황해권내 여객수송에 가장 많이 이용되는 수단이며, 화물운송, 특히 대규모 물량의 장거리 수송에는 해상운송이 주로이용(OECD, 2010;88).

○ 환황해권 역내 무역과 교류의 촉진되면 지방정부 간 항공물류 및 여객운송이 지속적으로 증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결과적으로 공급, 수요망이 다변화되면서 중소규모 항만 및 공항이 각광받게 될 것으로 기대됨

- 서산 KZ비행장 민항기 취항으로 환황해권 중국 및 큐슈, 동남아시아 지역 등 단거리 중심의 노선에 취항
- 한서대학교 태안공항에는 관광 및 통근용 commuter 공항으로 육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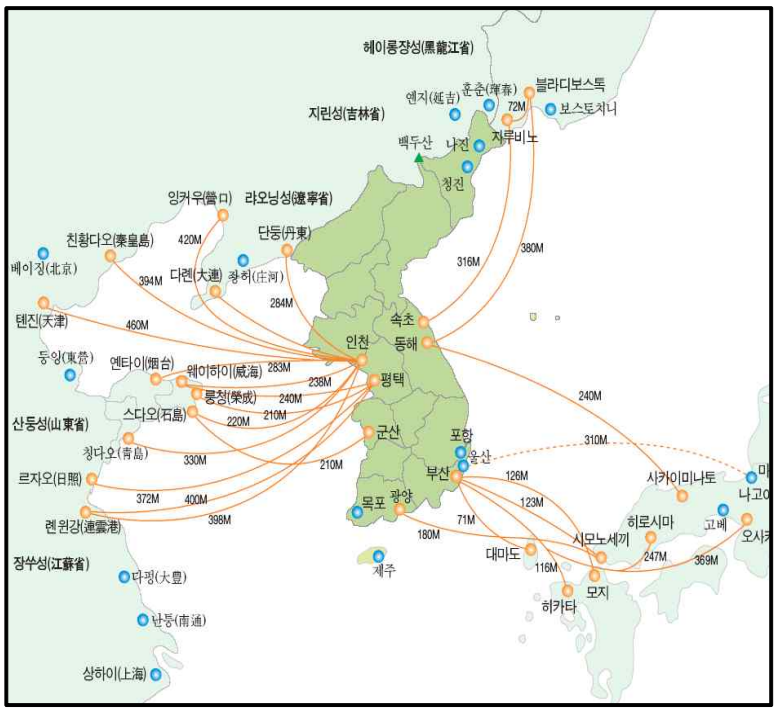
○ 한중간 해운과 육상수송을 결합한 Sea & Land 운송방안, 한중간 열차 페리운송의 도입도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은 있음.

- 현재로서는 시기상조라 할 수 있으나, 중국 서부대개발과 연계한 중국 내륙철도 CY 및

무수항(dryport) 개발·운영과 한-중 간 Sea&Rail 물동량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중국 측의 통관 간소화 등을 중국측과 협의필요(해양수산부, 2013; 232).

○ 환황해권 크루즈 시장은 중국을 주요시장으로 한국과 일본이 보조시장 역할을 하면서 성장할 것으로 예상(해양수산부, 2013;287)하고 있으나, 대형화 추세로 인해 인천, 부산, 제주가 모항/준모항 기능을 수행할 것으로 예상됨.

- 환황해권의 크루즈시장 규모는 급속히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어, 충남도 이에 대비는 해야할 것이지만, 모항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배후도시가 발달하지 않아. 크루즈시장에 한계는 있지만, 보령신항과 대산항 정도를 쿠루즈항만으로 개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대산항을 중국 및 큐슈 등과의 카페리 국제노선을 위한 거점항만으로 육성함.



[그림 18] 환황해권 카페리 운송로

6) 환황해권 지역 간 중층적 인적 · 문화 교류의 강화

○ 초국경적 협력의 문화적 장애요인에도 불구하고, 환황해권내 3국은 오래전부터 문화교류를 통해 협력관계를 유지해 왔음

- 최근 한중일 3국의 문화적 격차가 점차 줄어들고 있고, 이러한 현상은 젊은 층에서 두드러지고 있음.
- 패션과 엔터테인먼트(영화, TV드라마, 음악, 만화, 애니메이션 등) 부문이 문화공동체로 이끄는 주요 동력임

○ 한중일 모두 고숙련 외국인 근로자 및 유학생 비중을 늘리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있음.

- 충남권내 대학들은 외국유학생 중 역점을 두고 있는 국가로 중국 유학생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있으나 대학차원의 통합적 학사 및 생활관리는 매우 열악한 수준임. 이는 우리 나라 외국유학생 유치가 학생유치 차원에서만 머물러 있기 때문이기도 함(구자억, 2014:193).
- 충남지역은 전체인구 대비 외국인 거주자 비중이 높지 않고, 외국인이 거주하기에는 불편함이 상존함.

○ 관광은 환황해권내 민족, 문화간 상호이해 증진을 위한 출발점이 될 수 있다는 차원에서 3국 모두 중시하고 있음.
- 한중일 관광패턴은 대부분 도쿄, 서울, 베이징과 같은 각국의 수도에 편중되어 있어 환황해권내 관관상업이 비교적 정체되어 있음(OECD, 2010;114)
- 충남은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중장기적인 투자가 요구됨. 중국의 관광패턴이 서울 중심의 상품구매 패턴을 언제까지나 유지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백제문화를 중심으로 전통 및 농촌, 해양관광을 위한 기반을 마련해가는 노력이 필요함.

○ 학술기관은 연구원, 학생과 같은 인적자원 및 지식, 정보 등 지적자원의 흐름을 원활히 하여 장기적인 초국경적 협력을 도모하게 함. 또한 민간부문과 연계하여 지역적 혁신을 활성화할 수도 있음. 지식교류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하고, 공동연구 성과를 도출하는데 기여함(OECD, 2010;119).
- 충남에는 상당수의 대학들이 환황해권내 대학들과 초국경적 협력을 하고 있으나, 현재는 유학생들을 유치하기 위한 목적의 교류협력이 중심이 되고 있음.
- 충남지역 연구기관들도 환황해권내 초국경적 협력을 시도하고 있으나, 초보적인 단계에 머물고 있음.
- 따라서, 환황해권내 대학들간의 다자간 학술교류를 강화함으로써 새로운 지식과 가치를 창출하고, 씽크탱크간 공동연구 등을 통한 다자간 네트워크 구축도 요구됨.

7) 충남의 실정에 부합하는 지속가능한 관광패러다임 구축

○ 충남도가 외국인 관광객 유치와 관련하여 서울 및 수도권, 부산권 등과 동일한 방식으로 경쟁하는 것은 불가능함
- 현재 국내에서 외국인의 관광지로는 서울, 제주, 부산 등이 자체적인 지명도를 확보하고 국제관광지로서 입지를 키워가고 있음
- 충남은 쇼핑, 오락 등 분야에서 서울 등 수도권가 경쟁이 불가능하며, 자연경관 분야에서는 제주와 비교우위를 확보하기 어려움

○ 우선 대규모 관광객 유치는 충남지역의 관광객 수용역량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소규모 관광단을 유치함.
- 중국 상품의 고급화로 쇼핑 중심의 관광패턴은 언젠가는 퇴조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충남지역의 실정에 맞는 관광컨텐츠 개발이 필요함.

- 중국인이 접하기 어려운 낙조관광, 충남의 농수산물을 활용한 특색음식관광, 사계절 머드관광 등의 상품을 개발하되, 숙박은 기존 숙박시설과 더불어 안면도 펜션을 활용하는 방안도 필요함
- 당진 왜목항 구상중인 마리나항만을 중국인들의 해양레저체험을 유치할 수 있도록 계획단계에서부터 반영할 필요.

○ 충청남도는 관광자산에 기반한 힐링(healing) 중심의 휴양 관광지로서 포지셔닝하는 것이 현실적이며, 또한 미래지향적임
- 충남은 온천, 해안, 역사문화, 종교 성지 등 자원이 고루 분포하고 있어, 휴양을 중심으로 의료관광을 결합하는 방식으로 특화 전략을 펴는 것이 현실적임
- 이는 중화권의 소득 증대에 따른 휴양 수요를 끌어내기에 적합한 것으로 국제적 의료관광(건강 검진 등)서비스를 구축하는 것이 매우 긴요

○ 충남지역 완결형 외국관광객 유치전략보다는 충남-충북-대전-세종과 관광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자산공유형 네트워크 전략이 효과적임.
- 현재, 세종시 농촌체험(산야초밥상, 천연비누만들기체험), 중앙정부청사 옥상관람-대전 유성온천-금산인삼시장을 연계하는 중국인 관광프로그램에 매달 1,000명 정도의 중국인이 참여하고 있음.

○ 중장기적으로는 공항, 항만, 숙박단지, 리조트시설, 쇼핑몰 등 관광기반을 점진적으로 확충함으로써 충남지역 완결형 관광지대 조성이 가능할 것임.

8) 환황해권 전략지역에 대한 아젠다 발굴 및 정책분석 기능 강화

○ 현재 환황해권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정책, 무역, 투자 등과 관련한 조사, 연구, 분석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은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대표적임.
-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서는 아시아태평양실 중국팀과 일본팀, 중국권역별·성별연구단과 북경사무소를 중심으로 중국의 경제정책 및 동향, 제도, 대한국경제관계, 연구네트워크, 권역별·성별연구, 중국 및 경제조사연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이외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출연연구원, 공사 등에서도 중국관련 조사, 연구, 무역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산업연구원(KIET)의 해외산업정보와 북경지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중국연구센터,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중국사무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의 중국지역본부 및 중국사업단, 일본지역본부, 한국무역협회의 국제무역연구원 등에서도 중국 및 일본관련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 출연연구원에서는 인천발전연구원이 한중DB를 통해 중국동향 및 연구를 수행해 왔으며, 전남발전연구원 중국연구센터, 경기연구원, 전북발전연구원, 충남연구원 중국연구팀 등을 중심으로 중국관련 연구를 추진하고 있고, 최근 충북발전연구원에서도 중국연구센터를 설치하였음.

- 그러나 일본관련 연구는 따로 부서를 두어 운영하고 있지는 않음.

○ 중국 및 일본관련 연구조사는 기업연구소에서도 기업 및 무역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 삼성경제연구소, 현대경제연구원, LG경제연구원, 중소기업연구원 등에서도 중국 및 이론관련 연구보고서, 뉴스레터, 포럼, 세미나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 대학의 중국 및 일본연구소들도 중국 및 일본연구, 학술 및 인적교류, 아카이브 구축 등을 핵심사업으로 연구 및 조사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고려대학교 중국학 연구소, 한국외국어대학교 중국연구소, 성균관대학교 성균중국연구소, 부산대학교 중국연구소, 중국관행연구사업단(인천대학교 중국학술원, 중국·화교문화연구소, 인문한국사업단) 등의 연구소들이 활동을 전개하고 있음.
- 서울대학교 일본연구소, 단국대학교 일본연구소, 국민대학교 일본연구소, 한국외국어대학 일본연구소, 인천대학교일본문화연구소, 동서대학교 일본연구센터, 한림대학교 일본학연구소, 동국대학교 일본학연구소, 한양대학교 일본학국제비교연구소 등을 중심으로 활동을 전개하고 있음.

○ 이외에도 언론기관, 금융기관, 민간단체 등에서도 중국과 일본 관련 연구 및 조사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이와 같이 환황해권내 중국이 G2국가로 부상함에 따라 국내의 수많은 기관들이 중국의 미래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표명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중국동향에 대한 정보수집에 매진하고 있음. 그러나 정작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필요한 중국관련 정보를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기능은 여전히 미약함.

○ 따라서, 지금까지 수집한 정보를 지방자치단체 등이 중국 및 일본의 지방정부와 교류협력을 위해 의미 있는 정보로 가공하고 제공하는 연구기관의 역할정립과 함께 중국과 일본의 모든 지역에 대한 정보보다 지방자치단체가 전략적으로 교류협력을 추진하는 지방정부에 대한 체계적이고 심도 있는 정책분석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충청남도에서는 환황해권 도시 및 지역정보의 플랫폼을 충남연구원에 두고 그 인력과 기능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3. 충남도 '아시아의 지중해 프로젝트' 계획안의 충남주도전략 모색

○ 황해는 우리나라(남북한)와 중국이 해역을 공유·연결하고 있는 지중해의 개념임

- 동국대 윤명철 교수(1993)는 "동아지중해(East Asian Mediterranean Sea)"라는 모델을 제시
- 역사적으로 황해를 사이에 두고 한중일간 해양교류·협력 및 갈등이 동시에 존재해 왔음.

○ 충청남도에서 추진중인 서해안권 발전전략의 일환으로 '아시아의 지중해' 담론 대두

- 충남도에서는 아시아의 지중해 담론을 정책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기획조정실에 「환

황해프로젝트추진단」 을 설치 운영하고 있음.

- 경부중심의 개발축이 서해안권으로 이동하고 있고, 충남도청의 서해안권 이전으로 환황해권에 대한 국가적 관심 역시 높아지고 있어, 아시아의 지중해 구상은 시기적으로 적절한 정책으로 판단됨.

○ 충청남도에서는 “황해를 아시아의 지중해로 만드는 원대한 구상실현”을 미션으로 서정하고, 3대목표(아시아 최고의 투자드림랜드 조성, 신해상실크로드 구축, 사통팔달의 인프라 확충), 6대 추진전략과 13대 추진과제를 제시하고 있음.

〈표 10〉 6대 전략별 추진과제

추진전략	추진과제
매력있는 투자여건조성	• 외국인 투자지원제도 정비 • 분야별 산업클러스터 조성 • 충남브랜드 가치 제고
선제적 투자유치 추진	• 해외홍보·판촉활동 강화 • 중국 현지 투자유치센터 운영
산업별 해외교역 증진	•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 • 해외 틈새시장 개척
분야별 국제교류 강화	• 범아시아협의체 구성 및 운영 • 분야별 국제교류강화
교통 및 물류인프라 확충	• 항만, 도로, 철도, 공항 등 확충 • 국제항공, 해운항로 개설
인적네트워크 구축	• 아시아 국가별 전문가 Pool 구축 • 국가별 현안 대응체제 구축

자료: 충청남도. 2014. 황해를 아시아의 지중해로 만들기 위한 「환황해프로젝트팀」 추진과제검토.

○ 아시아의 지중해 프로젝트를 위해 충청남도가 제시한 미션, 목표, 추진전략, 추진과제가 환황해권내 충남의 위상이나 중국 및 일본과의 관계에 부합하게 설정되었는지를 재검토할 필요성이 대두됨.

○ 우선 미션, 비전, 핵심가치, 전략 등에 대한 재정립이 요구됨.

- 미션(Mission)은 이 프로젝트의 존재이유, 사명, 이념, 궁극적 목적 및 방향성을 말하고, 비전(vision)은 프로젝트가 꿈꾸는 미래의 청사진, 성취하고자 하는 소망, 핵심가치(core values)은 프로젝트 성공의 DNA, 조직문화, 영속적이고 내적인 신념, 정체성사고 및 행동의 기준을 의미함
- 「황해를 아시아의 지중해」 프로젝트의 미션은 충남의 입장에서 보면, 충남이 백제왕국의 중심지역으로서 해양교류를 주도해온 것과 같이 환황해권의 초국경협력의 중심자치단체로 비상하겠다는 원대한 꿈을 담고 있음. 이는 환황해권 지방정부간 초국경적 통합공동체의 실현이 궁극적 사명이요 목적이라 할 수 있음.
- 이 프로젝트는 환황해권내 지방정부들이 민족이나 국경, 제도에 관계없이, 육상·해상·하늘을 통해 경제·사회·문화적으로 교류협력하면서 지속가능한 초국경 협력지대를 형성하는 청사진을 그려볼 수 있음. 즉, 충남 주도의 지속가능한 초국경 협력지대를 형

성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음.

- 이러한 미션과 비전의 실현을 통해 성공적인 프로젝트가 되기 위해서는 환황해권 공동의 정체성, 호혜적 관계 형성, 중장기적 접근, 다자간 협력네트워크, 중앙-지방, 민-관 거버넌스체계 구축, 경제적 통합, 물리적 인프라 통합, 사회문화적 통합 등이 핵심키워드라고 할 수 있음.
- 충남도가 제시한 13대 추진전략이 기본적으로 너무 많은 전략이 포함되어 있는바, 비전을 고려하여 충남도가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전략을 선택과 집중이라는 관점에서 융복합화하고, 체계화할 필요가 있음.

Ⅴ. 맺음말

○ 환황해권의 범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학자들간에도 의견일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환황해권의 범위는 활용 및 정책의 목적에 따라 유연하게 설정할 수 있을 것임. 다만, 기존의 연구에서 제시된 범위나, 일반적으로 인식되는 황해의 범역을 넘어서는 범위설정에 대해서는 명확한 근거를 논리적 이유를 제시함으로써 범역설정에 대한 당위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임.

- 이 연구에서는 환황해권을 한국, 북한, 중국, 일본 등 황해를 접하고 있는 지방정부를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하였음.
- 황해를 동남아시아까지 포함하는 학자들도 있지만, 이를 정책적으로 수용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근거를 논리적으로 구성해야 함.

○ 국내외 초국경 협력사례를 살펴본바 발트해지역(BSA)과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NEAR), 동아시아경제교류추진기구(OEAED)가 활발한 다자간 초국경 협력네트워크라 할 수 있음.

- 이러한 지역(도시)은 초국경 협력에 대한 명확한 미션과 비전, 목표를 설정하고 있으며, 분과(영역)중심의 협력사업, 사무국의 주도성 등이 돋보임.
- 환황해권 초국경 협력의 활성화를 위해 비교적 성공적인 초국경 사례에 대한 학습이 필요하며, 초국경 협력을 위한 충청남도의 주도성 확인이 필요함.

○ 환황해권내 초국경 협력이 강화될것으로 전망되며, 국가보다는 소경제권별 대도시 및 경제권역간 연계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됨.

- 중국의 국가핵심전략 변화 즉, 뉴노멀[14], RCEP, 일대일로, 경제벨트 등 중국의 이니셔티브가 환황해권의 미래에도 주도적인 영향력을 발휘할 것으로 예상됨
- 환황해권내 한중일 지방정부간 초국경 공동체 건설을 위한 시도는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됨.

14) 최근 중국경제의 뉴노멀화가 충남경제에 대해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증분석결과 현재의 대중 경제협력 관계하에서는 부정적 영향(pain)이 긍정적 효과(gain)를 크게 상회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것으로 분석하였음 (한국은행 대전충남본부. 2015. 중국경제의 뉴노멀화가 충남경제에 미치는 영향 및 시사점).

○ 이러한 시점에서, 환황해권내 초국경 협력은 양자에서 다자간, 친선위주의 인적·문화적 교류에서 상호이익을 위한 공동사업방식으로 이행되어야 할 것임.

- 환황해권내 초국경 협력공동체 형성에 대한 지방정부간 공동의 비전을 설정하고 공유해야 함.
- 환황해권내 초국경 협력은 지방정부간 상호보완성을 고려한 제휴, 협력이 필요하며, 이는 객관적인 지역역량 분석에 근거해야 함.

○ 환황해권시대에 도래에 따른 충청남도의 대응전략도 충남의 현재역량과 어떤 미래를 꿈꾸고 있는가를 분명히 하고, 선택과 집중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해야함.

- 충청남도가 주체가 되는 지방외교 3.0을 본격적으로 준비하고, 전략적으로 교류해야 할 지역과 교류분야를 선정하여 충남의 주도권을 확보해야 함.
- 충남산업생태계 주체들의 참여하는 플랫폼(거버넌스)을 형성함으로써 환황해권내 산업경쟁 구도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도록 해야함 : 생산연쇄의 상류(R&D, 소재부품) 및 하류(솔류션, 시스템판매).
- 위성형 신산업지구로서의 정책경험과 사례를 국제교류 및 협력 컨텐츠로 체계화하고 공유하는 노력을 충남이 주도할 수 있음.
- 충남 서해안지역을 중심으로 환황해권 연계를 위한 해상 및 항공기반을 확충(서산비행장 민항기 취항, 한서대학교 태안공항 관광 및 통근용 commuter 공항 육성, 대산항을 국제카페리 거점항만, 보령신항과 대산항의 크루즈항만 개발)
- 환황해권내 근로자, 유학생, 관광객, 학술연구기관 등 중층적 인적·문화교류를 강화
- 충남 실정에 부합하는 관광컨텐츠(힐링기반, 휴양중심, 온천, 의료관광 농촌체험 등) 개발을 통해 지속가능한 관광패러다임 구출
- 환황해권 전략지역에 대한 아젠다 발굴 및 정채분석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충남연구원에 환황해권 도심 및 지역정보 플랫폼 구축

○ 충청남도는 환황해권 시대 초국경 협력의 주도권을 형성하기 위해 환황해프로젝트팀을 설치하고 황해를 아시아의 지중해로 만드는 프로젝트를 구상하고 있는 점은 고무적임. 향후, 미션, 비젼, 핵심가치, 전략 등에 대한 보다 광범위한 의견수렴을 거쳐, 선택과 집중이라는 관점에서 융복합화하고, 체계화할 필요성이 있음.

<참고자료>

강용기. 2005. 환황해권 지방정부간의 협력과 관리체제 구축. 한국자치행정학보. 제19권 제3호.

경기개발연구원. 2008. 환황해권 경제협력에 대한 연구. 정책연구 2007-57.

구자억. 2014. 중국의 외국유학생 유치정책 및 사례연구 : 대학을 중심으로. 대외경제정책연구원·한국교육개발원.

국토교통부. 새만금 복합도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환황해권(한중일) 상생협력체계 구축. 2011.

김군수 외. 환황해권 경제협력에 대한 연구. 경기개발연구원. 2008.

김원배. 2001. 동아시아 국가체제 변화와 초국경적 공간의 등장. 공간과 사회. 통권 제15호.

김원배. 2012. 대국굴기와 한반도 : 동북지구를 중심으로. 국토연구원 2011년 제4차 한반도포럼 발제자료.

김원배. 환황해권 자유지역 연계망 구축의 전략과 방안. 국토연구원. 2001.

김진표 의원실. 환황해권 시대 바람직한 정책방향. 2012. 국회도서관

노수연 외. 2015. 뉴노멀 시대 대응을 위한 2015년 중국지역별 경제정책과 시사점. 중국권역별·성별 기초자료 15-01. 대외경제정책연구원. p.31.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www.neargov.org)

동아시아경제교류추진기구(http://www.oeaed.com/guide/)

발트해지역(http://www.balticsea-region-strategy.eu/. 2015년 5월 30일 접속

산업통상자원부. 2014. 보도자료.

이강선. 환황해권 구축과 충청남도의 역할. 1997.

이동형. 2010. 환동해권 지방네트워크 실태와 발전방안 모색. 아태연구 제17권 제3호.

이봉길. 2015. 중국의 꿈, 일대일로 프로젝트 현황과 영향. Trade Focus, vol.14 no.15. 한국무역협회.

장윤정. 2010. 중국 환황해 주요도시 발전전략 연구. IDI연구보고서 2010-47. 인천발전연구원.

정환우. 2008. 환황해권 지역협력의 경제적 의의와 파급효과. 환황해권 협력과 서해안 황금벨트구상.

충청남도. 2014. 황해를 아시아의 지중해로 만들기 위한 「환황해프로젝트팀」 추진과제검토.

한국경제매거진, 2008.7.28(http://magazine.hankyung.com)

한국은행 대전충남본부. 2015. 중국경제의 뉴노멀화가 충남경제에 미치는 영향 및 시사점.

환경부. 환황해권 국가간 환경협력체제 구축에 관한 연구. 2002.

Economist Intelligence Unit(http://www.eiu.com/)

EUSBSR. 2014. A Beginner's Guide to the Baltic Sea Region Strategy.

KIEP북경사무소. 2014. 징진지 공동발전 추진동향.

KOTRA. 2015. RCEP협상동향과 참여국별 전략 및 산업계반응.

OECD. OECD지역정책보고서 : 환황해권 초국경적 도시간 협력. 2010.